

정책연구 2019-08

대전시 군사시설보호 지역의 발전을 위한 민·관·군 협력 방안 : 자운대를 중심으로

최길수 · 최병학

연구책임
비상임연구원

- 최길수 / 책임연구위원
- 최병학 / 한국갈등관리학회장

정책연구 2019-08

**대전시 군사시설보호 지역의 발전을 위한
민·관·군 협력 방안 : 자운대를 중심으로**

발행인 박재목

발행일 2019년 7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287-2)

전화: 042-530-3517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 연구의 요약

- 대전시 군사시설보호구역인 자운대와 지역사회, 자운대와 지방정부(대전시, 유성구) 사이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의 발굴 및 추진에 있어서 3자 모두 소극적인 입장이었으며, 추진 사업의 성과 측면에서도 그리 높게 평가할 수 없음
- 본 연구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인 자운대를 중심으로 민·관·군이 시대적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그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지역사회와 정부 등과 상호 협력관계의 형성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된 연구방법은 문헌고찰, 자운대의 현황 및 민·관·군 협력 현황, 자운대와 지역민·지방정부간의 협력에 대한 설문조사, 지역발전을 위한 민·관·군 협력 활성화 방안 등임
- 문헌고찰에서 논의한 내용은,
 - 첫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의의를 통해서 이것의 개념, 특징, 관련 법 제도, 해외 관리사례(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둘째, 민·관·군 협력의 의의를 통해서는 민·군 및 민·관·군 협력관계의 개념, 민·관·군 협력관계의 의의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셋째, 선행연구의 검토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경제적인 관점, 법·제도적인 개선, 갈등관리 관점, 그리고 민·관 상생협력 관점 등으로 논의되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하였음

- 넷째, 자운대 및 민·관·군 협력 현황에 대한 조사에서는 대전광역시는 2016년 6월 30일 현재, 총 19.9㎢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보유하고 있는 자운대의 일반적인 현황, 자운대 소속 주요부대 소개, ‘대전광역시 관·군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대전시-자운대 간의 협력 현황 및 추진 실적, 유성구-자운대 간의 협력사업 현황, 지역주민-자운대간의 협력 추진실적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음
- 자운대와 지역주민 및 지방정부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2019년 5월 1일부터 8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대면조사를 실시하여 131부를 수거하고 분석하였는데,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응답자 131명은 자운대 인근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 자운대에 대해 느끼고 있는 인상(이미지) 등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운대가 외부에 잘 알려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둘째, 자운대 내에 소재하는 있는 편의시설(쇼핑센터, 수영장, 체력단련장, 호국회관, 체육관) 활용도는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음
 - 셋째, 자운대 거주자에 대한 생활여건에 대해 불어본 결과, 대중교통 편리성과 학생들의 교육여건에 대해서는 안 좋을 것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많았음
 - 네째, 자운대가 주관이 된 축제 등의 행사 참여도는 아주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향후 자운대가 개최했으면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축제 등의 행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다섯째, 자운대가 지역발전을 위해 어느정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자운대와 자운대 인근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유성구와 대전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 대전광역시와 자운대 간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의 구성요소(4개 주요 영역)는 첫째 민·관·군 친선·교류·협력기회 확대 및 상호발전, 둘째 민·관·군 보유자원 협력적 활용 및 공유화 확대, 셋째 민·관·군 소통·협력채널 강화 및 정책협의체 운영 고도화, 넷째 민·관·군 학술협력 및 국방산업 맞춤형 파트너십 구축 등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민·관·군 친선·교류협력 기회 확대 및 상호발전”을 위해서는 ① 대전광역시~자운대 친선·교류협력 교류보 확대, ② 자운대~대전광역시 민·군페스티벌 공동개최 지원, ③ 대전광역시~자운대 상호 교류방문 및 친목활동 다각화 등 추진
 - 둘째, “민·관·군 보유자원 협력적 활용 및 공유화 증진”을 위해서는 ① 대전광역시~자운대 행정지원 및 협력적 공공행사 활성화, ② 대전광역시(유성구)~자운대 작은도서관 및 방과후 학습 지원, ③ 대전광역시~자운대 현장기반 행정서비스 제공 및 공공시설 설치·지원 등 사업 추진
 - 셋째, “민·관·군 소통·협의채널 활성화 및 정책협의체 운영 고도화”를 위해서는 ① 대전광역시 자운대 부대방문 및 소통·협의채널 확보, ② 대전광역시~자운대 민·관·군 정책협의회 운영 제도화, ③ 대전광역시~자운대 개별 기관협력체 구성 및 확대 등의 사업 추진
 - 넷째, “민·관·군 학술협력 및 국방산업 맞춤형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서는 ① 대전광역시~자운대 학·군협력 및 상호 교육발전 활성화, ② 대전광역시~자운대 민·군겸용기술협력 강화, ③ 대전광역시~자운대 국방벤처산업 진흥 및 국방R&D 고도화 등 사업 추진

■ 정책 제언

- 앞에서 서술한 민·관·군 상생협력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및 협력 활성화 방안을 바탕으로 대전광역시와 자운대 간 민·관·군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민·관·군 친선·교류협력 기회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서는 ①대전시민자운대 부대방문 활성화, ②유관기관·단체 친선 부대견학 확대, ③자운대 민·군페스티벌 지원 강화, ④정책현안 워크숍 및 세미나 공동개최, ⑤자운대 부대(부서)~대전시(실·국) MOU 체결, ⑥‘명예시민·명예시장’, ‘명예부대장’, ⑦대중교통서비스 확충을 통한 주민 및 시민의 접근성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민·관·군 보유자원 협력적 활용 및 공유화를 증진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①상호 지식·정보·노하우·노웨어 공유화, ②민·군기술협력 촉진(Spin-on/Spin-off), ③관련분야 전문가 인적교류·협력 증진, ④조직간 자료교환 및 협의 추진, ⑤협력·공동사업 확대, 필수분야 참여 강화, ⑥자운대 내 유휴부지(약 5만평)를 활용하여 가칭 ‘민·군화합체육센터’ 건립 추진 등의 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셋째, 민·관·군 소통·협의 채널 활성화 및 정책협의체의 운영을 고도화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과제로는 ①계룡시의 사례에서와 같이 자치법규의 제정이 필요하고, ②관·군협의회의 운영 횟수 확대와 교차개최 추진, ③민·관·군협력체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가칭 ‘대전광역시 국방안보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민관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함
 - 민관군 업무를 담당할 전담조직의 설치는 대전광역시 비상대비과 내 가칭 ‘민군협력팀’을 신설하는 방안임
-
- 넷째, 민·관·군 학술협력 및 국방산업 맞춤형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과제로는 ① 대전시 중·장기 국방산업발전 연계 추진, ② 민·군기술협력 국방벤처R&D산업 촉진, ③ 방산기술개발 수출 진흥 상호지원 활성화, ④ 민·관·군 산·학·연 기술협력 생태계 구축, ⑤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계룡대·자운대·국방대 협력네트워크 구축, ⑥ ADD·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대덕연구단지·KAIST·충남대 등 연계체계 지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차 례

1장 서론	3
1.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2장 관련 문헌고찰	9
1.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의의	9
2. 민·관·군 협력의 의의	18
3. 선행연구의 검토	28
3장 자운대 및 민·관·군 협력 현황	35
1. 자운대 현황	35
2. 대전시-자운대 간의 협력 현황	43
4장 민·관·군 상생협력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53
1. 설문조사 개요	53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54
3. 분석결과의 시사점	71
5장 민·관·군 협력 활성화 방안 : 자운대를 중심으로	77
1. 대전시 민·관·군 협력을 위한 기본구상	77
2. 협력의 전제	78
3. 협력사업의 주요 내용	80
6장 요약 및 정책 제언	99
1. 요약	99
2. 정책 제언	102
참고문헌	105
부 록	107

표 차례

<표 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기준	10
<표 2-2>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 면적(2016.6.30.)	11
<표 2-3> 일본과 대만의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내용	13
<표 2-4> 군사시설보호법 체계 및 변천 과정	14
<표 2-5> 군사적 가치와 민간적 가치의 비교	18
<표 2-6> 민·군협력관계 이론적 접근	20
<표 2-7> 철원군 민군협력사례 현황(2010~2015년)	22
<표 2-8> 계룡시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주요 내용	27
<표 3-1> 자운대 주둔부대 현황	37
<표 3-2> 자운대 인구 현황(22,570명)	37
<표 3-3> 자운대 주거 현황	37
<표 3-4> 자운대 복지시설 현황	38
<표 3-5> 협력·요청사업 총괄	45
<표 3-6> 대전시 요청사업 (18년 전반기)	45
<표 3-7> 군부대 요청사업(1~9/전반기)	45
<표 3-8> 군부대 요청사업(10~24/후반기)	46
<표 4-1> 설문 참여자의 개인별 특성	54
<표 4-2> 자운대 주변 생활의 만족도	55
<표 4-3> 응답자별 자운대 주변 생활의 만족도	56
<표 4-4> 자운대에 대한 인상	57
<표 4-5> 응답자별 자운대에 대한 인상	57
<표 4-6> 자운대가 외부에 알려진 정도	58
<표 4-7> 자운대 주둔 부대명에 대한 인지도	59
<표 4-8> 자운대 편의시설 이용도	60
<표 4-9> 자운대 이용희망 편의시설	61
<표 4-10> 자운대 개방통로 이용도	62

<표 4-11> 자운대 접근을 위한 대중교통 편리성	63
<표 4-12> 응답자별 자운대 접근을 위한 대중교통 편리성	63
<표 4-13> 자운대 학생들의 교육여건에 대한 상대적 인지도	64
<표 4-14> 응답자별 자운대 학생들의 교육여건에 대한 상대적 인지도	65
<표 4-15> 자운대 주관 축제 등 행사참여 경험	66
<표 4-16> 응답자별 자운대 주관 축제 등 행사참여 경험	66
<표 4-17> 지역사회를 위한 자운대 개최 희망 행사	67
<표 4-18> 응답자별 지역사회를 위한 자운대 개최 희망 행사	68
<표 4-19> 자운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69
<표 4-20> 응답자별 자운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69
<표 4-21> 자운대에 대한 유성구의 지원 필요성	70
<표 4-22> 자운대에 대한 대전시청의 지원 필요성	70
<표 4-23> 자운대에 대한 대전시청의 지원 필요성	71

그림 차례

<그림 5-1> 대전시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기본구상 및 추진구조	78
--	----

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 전국적으로 광역수준에서 군사시설이 없는 곳은 거의 없으며, 군과 지역사회의 관계는 협력적이기 보다는 갈등의 관계로 인식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군이 지역에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군사시설 혹은 군사기지를 필요로 하지만, 이러한 시설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입장에서는 지역공동체에 별다른 도움이 아니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역의 토지자원과 자연자원을 두고 경합하는 외부경쟁자로 여김(허훈, 2008: 27)
 - 과거에 많은 보고서들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군과 지역사회, 지역사회(민)-군-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갈등의 관계로 인식하고, 주체들 간의 갈등의 원인규명, 갈등해결 방안 모색 등 갈등관리에 초점을 두고 접근해 왔지만, 이들 3자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한 사례들은 그리 많지 않음
- 그러나 최근 들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민)-관-군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들이 자주 보고되고 있음
 - 따라서 지역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공간적 배경을 중심으로 민·관·군의 지역발전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이러한 공통의 지역발전 의제를 풀어가기 위한 협력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모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대전광역시는 2016년 6월 30일 현재, 총 19.9km^2 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보유하고 있음
 - 대전시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은 17개 시·도 중에서 제주와 울산에 이은 3번째로 적은 면적이며, 이중 통제보호구역 3.5km^2 , 제한보호구역 14.8km^2 , 비행안전구역 1.6km^2 임
 - 여타 시도에 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면적이 적은 규모이나 자운대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전시는 군사안보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운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민간과 공공부문이 접근할 수 없는 경계와 통제구역이 아니라, 민·관·군이 협력하여 지역적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변화하고 있음
 - 따라서, 대전의 대표적 군사시설보호구역인 자운대 국방자원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와 공공기관이 서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대전광역시 자운대에 주둔하고 있는 17개 부대는 대부분 육해공군의 교육훈련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보안이나 민간에 대한 경계의 강도가 전방과 해안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게 인식되고 있음
 - 즉,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와 군은 갈등발생에 따른 해결을 위한 민-군 간 관계 설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자운대는 지역사회(민)와 군이 상생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군사시설보호구역인 자운대와 지역사회, 자운대와 지방정부(대전시, 유성구) 사이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의 발굴 및 추진에 있어서 3자 모두 소극적인 입장이었으며, 추진

사업의 성과 측면에서도 그리 높게 평가할 수 없음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민·관·군이 시대적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그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지역사회와 정부 등과 상호 협력관계의 형성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문현고찰, 자운대의 현황 및 민·관·군 협력 현황, 자운대와 지역민·지방정부간의 협력에 대한 설문조사, 지역발전을 위한 민·관·군 협력 활성화 방안 등임
 - 문현고찰에서는 해외사례 소개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의의, 국내의 대표적인 사례를 포함한 민·관·군 협력의 의의, 선행연구의 검토 등임
 - 자운대의 현황 및 민·관·군 협력 현황에는 자운대의 일반 현황을 포함한 주요 주둔 부대에 대한 소개, 자운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 현황에 대해서는 자운대와 대전시, 자운대와 유성구, 지역주민과 자운대 사이에 그동안 있었던 사례 소개
 - 자운대와 지역민·지방정부간의 협력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자운대 지역 인근 지역주민(신성동, 축목동)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함
 - 마지막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민(지역주민)-관(대전시, 유성구)-군(자운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함

- 앞서 제시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연구방법은 문헌고찰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임
 - 문헌고찰은 선행연구에서 발표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민·관·군 협력(거버넌스)에 관한 문헌들을 검토, 자운대 및 대전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통해 자운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 추진 현황 등에 대한 검토
 - 설문조사는 자운대 인근 지역인 신성동과 축목동 거주민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현장에서 대면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는데, 분석은 항목별 빈도분석와 응답자 특성에 따른 교차분석을 실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2장

관련 문헌고찰

1.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의의
2. 민·관·군 협력의 의의
3. 선행연구의 검토

2장 관련 문현고찰

1.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의의

1)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개념

-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007년 12월 31일 통합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보호법]을 근거로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대공 방어협조구역, 민간통제선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박성범, 2014년 : 37)
-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이 있으며, 이러한 보호구역과 민간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을 포함하여 “보호구역 등”이라 하며(장순옥, 2016 : 4), 각각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박성범, 2014년 : 37)
 - 통제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 고도의 군사 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 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 제한보호구역은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 비행안전구역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 비행안전을 위해 지정하는 구역
 - 대공방어협조구역은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
 - 민간인통제선은 고도의 군사 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

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선을 말하며, 군사분계선의 이남 10km 범위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음

- 네가지 유형의 군사적 규제구역은 <표 2-1>의 기준에 의해 설정되었음

<표 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기준

구역		구역설정기준(base line)		구역설정범위(거리)		
민간인통제선		군사분계선 (MDL: Military Demarcation Line)		군사분계선 이남 10km 선		
군사 시설 보호 구역	통제 보호 구역	전방지역 (벨트형)	군사분계선(MDL)과 민통선(CCL)	군사분계선과 민통선간 10km 전 지역		
		후방지역 (도나츠형)	중요군사기지/시설 최 외곽 경계선	울타리외곽 0.3km 이내		
			방공기지 최외곽 경계선	울타리외곽 0.3km 이내		
	제한 보호 구역	전방지역 (벨트형)	군사분계선(MDL)과 민통선(CCL)	군사분계선 이남 25km 중 민통선이북지역 제외		
		후방지역 (도나츠형)	일반 시설	울타리 최외곽 0.3km 이내		
			비취락지역:최외곽 경계선	울타리 최외곽 0.5km 이내		
		폭발물관련시설, 일반 방공기지, 유도탄레이 더기지, 사격장, 훈련 장, 부대의 외곽경계선		울타리 최외곽 1km 이내		
		군용전기통신설비 설치 장소		시설 반경 2km 이내		
		군용비행장의 울타리 외곽 경계선		울타리 최외곽 5km 이내		
비행안전구역	전술항공작전기지, 지원항공작전기 지, 헬기전용작전기지의 활주로 중 심 및 활주로 끝단			구역별로 상이		
대공방어협조구역	대공화기의 사정거리 구간까지 화 기의 수평조준선			대공화기의 사정거리(2.3~3km) 내 수평 조준선 이상		

자료 : 강한구(2018: 83)

- 2016년 6월 30일 현재, 총 8,970.78㎢에 이르는 군사기지 및 군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이 있으며, 강원도와 경기도에 35.3%와 35.1%가 집중되어 있으며, 대형 탄약저장시설이 소재한 충청남북도(9%)와 경상남도(8%), 그리고 인천(3.7%)에 분포되어 있음(강항구, 2018: 91)

<표 2-2>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 면적(2016.6.30.)

(단위 : ㎢)

행정 구역	총면적 (a+b)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b)
		소계(b)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서울	158.1	97.2	6.2	91.0	60.9
부산	123.0	20.2	1.8	18.4	102.7
대구	124.8	10.5	-	10.5	114.3
인천	329.4	310.1	31.3	278.8	19.3
광주	132.0	5.0	0.4	4.7	127.0
대전	19.9	18.3	3.5	14.8	1.6
울산	0.8	0.8	0.1	0.6	-
세종	53.3	22.7	-	22.7	30.6
경기	3,148.5	2,409.8	464.1	1,945.7	738.7
강원	3,167.1	2,857.2	1,200.2	1,657.0	309.9
충북	429.8	86.9	3.1	83.8	343.0
충남	369.9	84.9	9.4	75.5	285.0
전북	136.0	27.9	1.1	26.8	108.1
전남	60.2	11.8	6.7	5.2	48.3
경북	412.1	45.3	2.1	43.2	366.7
경남	306.0	82.1	27.4	54.7	223.9
제주	0.1	0.1	-	0.1	-
계	8,970.8	6,090.6	1,757.3	4,333.3	2,880.2

자료 : 강항구(2018: 91), 재인용

- 이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 48%, 비행안전구역 32%, 통제보호구역 20%로 규제가 엄격한 통제보호구역의 비중은 낮고, 통제보호구역은 강원도(68%)와 경기도(26%)에 집중되어 있음

- 이에 비해 제한보호구역은 경기도와 강원도에 각각 45%와 38%, 비행 안전구역은 경기도에 26%, 경상북도에 13%, 충청북도에 12%, 충청남도에 10%씩 설정되어 있으며, 전북이 3.8%로 가장 낮음

2)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특징

- 군사시설보호 구역은 전 국토대비 9%를 차지하여 개발제한 구역 ($3,913\text{km}^2$), 백두대간 보호구역($2,624\text{km}^2$), 상수원 보호구역($1,280\text{km}^2$), 대비 각각 2.3배, 3.4배, 7.0배 등 광범위하게 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강한 행위 제한이 이루어 지는데 반해 법령에 의한 보상 및 지원은 미미한 수준임(장순옥, 2016: 22)
- 국공유지 및 사유지 면적이 전체 보호구역 면적의 89.4%로서 분단이후 오랜 시간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지역사회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지자체별 사업추진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요구와 개인 재산권 보장 요구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음(장순옥, 2016: 22)
- 군은 보호구역의 축소 및 완화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나 소규모 구역조정은 지역개발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비해제 지역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 우리와는 달리 일본(방위시설 주변지역 생활환경 정비법,' 74년)과 대만은 군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표 2-3> 일본과 대만의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내용

지원사업 내용		일본	대만
전차등의 사용, 사격, 폭격 등에 의한 장해방지공사의 조성		지자체 사업 추진시 비용의 일부 혹은 전액 지원	
항공기소음	주택방음공사	주택소유자 사업 추진 시 전액 지원	지자체 요청시, 군은 소음개선 업무 계획서 작성
	주민이주 보상	소유자 이전 희망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이주후 녹지대 정비	녹지대 및 완충지대 조성	
	매입 토지 무상공여	지자체가 공공시설 조성희망시 제공	
방위시설설치/운용에 따른 주민생활/영업저해 보상을 위한 민생안정시설 조성		지자체가 장해 완화, 환경시설, 사업안정화 시설 설치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환경위생, 녹화, 해양생태계보호, 지자체 공공시설, 주민복리시설, 건설/보수, 방음시설 설치
특정방위시설 주변지역 지원		특정방위시설(전투기, 포/항공기 사격장, 항만, 대규모탄약고, 군사시설면적의 20% 초과)의 면적, 시설운용 상태 등 고려 지자체에 교부금 제공	주요무기 훈련장, 실탄 사격위험 영향구역, 탄약고, 유류고, 탄약폭파소 주변지역 관련 지자체 요청시 심의후 지원

자료 : 국회국방위원회(2010: 28), 재인용

3)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법제도 검토

- 군사시설보호 제도는 1972년 12월 26일 [군사시설보호법]으로 제정된 이후 5차 개정과정이 있었고¹⁾, 마지막으로 제6차 개정(2007.12.21)을 통하여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등을 통합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법명이 개정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①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민

1) 5차 동안의 개정 시기를 보면, 제1차 개정(1981.12.31), 제2차 개정(1991.12.14), 제3차 개정(1993.12.27), 제4차 개정(1997.1.13), 제5차 개정(2003.5.15) 등이다.

통선의 지정 축소, ②통제보호구역내 공작물의 설치 허용, ③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④군사시설보호구역내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 및 협의매수 제도의 신설, ⑤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에 대한 이
의신청 제도의 도입 등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토지이용과 관련된
각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하였음(강한구, 2018: 81)

<표 2-4> 군사시설보호법 체계 및 변천 과정

구분	제정일자	현재(2017.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2007.12.21	7차 개정 (2016.1.19)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2008.9.22	18차 개정 (2016.12.5)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2008.9.22	6차 개정 (2016.2.29)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관리훈령	2009.4.21	7차 개정 (2016.7.15)

자료 : 강한구(2018: 82), 재구성

4)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해외 관리 사례²⁾

(1) 독일

- 독일의 연방군, NATO, 주둔 동맹군이 사용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약 1,000곳이 지정 또는 신청 중이고, 연방군이 소유·점유·권리 행사자로 관리 중인 토지는 약 3,500km²로서 이는 전 국토면적의 1%에

2)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관리에 대한 외국의 사례는 장순옥(2016: 29-37)의 글을 요약 정리 하였음을 밝힙니다.

해당되며 이 가운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 매입 또는 수용면적 등의 사항은 집계되지 않아 공식적인 통계가 없음

- 통독 후 미군기지 및 독일군의 재배치, 군사시설의 통합이용 등으로 군사시설부지에서 해제되는 토지가 늘어남에 따라 독일정부는 군사시설 이전 적지의 활용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였음
- 독일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과 운영방침은 군사시설보호구역법에 기술되어 있음
 - 정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특히 탄약고, 시격장, 통신시설(레이디 등)이나 기지 등의 시설 소재지에 지정하며, 그 범위는 군사시설로 인한 영향 범위를 산정하여 외곽경계선을 확보하고 해당 부지는 국가가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수용되지 않는 토지 가운데 건축행위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재산상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접 보상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존재하는 법이 토지수용법임
- 독일의 군사시설보호구역법은 군사시설의 입지에 따른 영향범위까지만 보호구역으로 수용하여 지정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건축 행위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군사시설보호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2) 프랑스

- 프랑스에서는 화약, 탄약, 폭약 및 폭발물 저장시설 등의 군사시설의 경우, 외곽 25m이내 지역에서는 공장 및 주거용 건축물이 금지되며, 사적지 요새는 250m이내 구역에서 건축이 금지되고, 전자신호기 주변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이 금지되고, 공용공항 주변지역에서는 시 계획보를 목적으로 건축물의 고도가 제한되고 군 당국과 협의해야 함

- 연안 구역에서는 건축 시 군당국과 사전협의가 필요하고 군용사격장 주변구역은 안전거리가 확보되어야 하고, 무선통신시설 주변구역에서는 고도제한이 요구됨
- 2차 대전 이후 접경지역을 제외한 내륙부나 도시지역에는 군사시설로 인한 민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이는 토지이용계획시 군사시설입지에 따른 규제내용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 반영되고 있기 때문임
- 프랑스는 공익을 우선하는 법체계를 갖고 있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데도 군사시설입지와 운영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냉전의 종식과 통독에 따라 군사시설을 통합하여 이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군사시설에서 해제되거나 이전되는 부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수립에 주력하고 있음
- 프랑스는 군사시설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률이 없어도 군사시설보호 및 관리에 따른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사항을 토지이용계획에 미리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군사시설 설치에 따른 건축 등의 규제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발생 시 군·지자체·주민대표가 협의를 통해 처리하고 있음

(3) 스위스

- 스위스는 1960~1980년대까지 상당수의 군사시설이 이전되었는데, 사격장은 무기체계가 달라짐에 따라 군자체적으로 이전계획을 세워 이전하고 모든 비용은 연방정부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군사시설 이전후 상당부분의 이전 적지는 지자체가 매수하여 사용하고 있고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공원과 문화시설로 활용하고 있음
 - 시가지 내 군사시설은 주로 민간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어 민-군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포츠센터, 회의장, 교육시설 등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음
-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법에 의하여 설치하고 모든 군사활동은 미리 알려주어 대비토록하며, 군사시설 설치계획부터 각종 협의절차를 거쳐 연방국회와 각 의회의 통과 후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이의제기 할 수 없음
 - 영세중립국으로서 군사부문은 교통, 에너지 등과 함께 국가계획의 최상위 고려사항으로 취급되며, 거의 모든 군사시설이 지하화되고, 민방위체계의 확립으로 주민활동을 위한 기본시설로 인식되고 있음
- 스위스 군의 국방계획은 여러 가지 시설계획에도 적용되고 있는데, 사격장 훈련장 설치와 비행장 관련 등에도 적용되며, 연방과 주정부의 각종 계획에 대해서도 적용에 대한 기준원칙이 규정되어 있음
 - 연방정부 국토발전처에서는 군사시설에 관한 각종 자료 및 도면 등을 공개하고 신규시설의 경우 설치계획 시작부터 주정부 및 관련단체, 토지소유주들과 협의절차를 거쳐 결정함으로써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있음

2. 민·관·군 협력의 의의

1) 민·군 및 민·관·군 협력관계의 개념

(1) 민·군 협력관계의 의의

① 민·군 협력관계의 개념

○ 일반적으로 민과 군은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각기 특유의 태도를 취하며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군에는 군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특유의 가치와 태도가 있는데, 군인들은 개인보다 집단을 더 우선시 하고 강조하며, 개인의사는 집단의사에 복종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음(김범수a, 2015: 5)

<표 2-5> 군사적 가치와 민간적 가치의 비교

민간적 가치	군사적 가치
- 권위에 대한 의문	- 권위에 대한 복종
- 자유	- 질서
- 다원성, 독립성, 기존가치체계에 대한 의문	- 통일성, 획일성, 기존가치의 수용
- 자기완성을 위한 개인주의	- 공동선을 위한 개인주의 희생
- 의문	- 신임, 확실성
- 겸손	- 자부심
- 다양성, 복합성	- 단순성, 통합성
- 내적 확신의 추구	- 외적 자세의 강조
- 상상력 개발	- 습관적인 행실
- 경험: 대리적	- 경험: 실제적
- 판단력	- 충성
- 내적 책임	- 외적으로 주어지는 권위에 대한 복종으로서의 책임

자료 : 김범수(2015a: 5), 재인용

- 민·군관계는 민과 군의 양자 간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오랫동안 민군관계는 정치학적인 측면에서 이해되고 설명되어 왔으며(김범수a, 2015: 5), 초기 민군관계론의 초점은 국가의 성립에 필수불가결한 군사력이 정치에 어떤 영향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였고, 한국을 비롯한 제3 세계 국가에서는 최근까지도 정치발전과 군대의 관계를 분석하고 민주정체를 수립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과제이기도 했(허훈, 2008: 30)
 - 민군관계를 주로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 시기에는 민군 관계가 군과 정치와의 관계로 정의되었으며, 군사와 민간은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접근되었음
 - 이 시기 민군관계에 대한 연구는 군과 정치권의 역학관계와 상호작용에 관한 주제가 대부분으로 군의 정치적 역할, 군의 정치개입 또는 정치로 부터의 퇴진 등이 탐구되었고, 군의 정치 관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관심의 주 대상이었음
 - 2001년 9.11테러사태 이후에는 국방의 핵심과제가 국가간의 전쟁에서 국가 간의 분쟁이나 비국가집단과의 전쟁으로 바뀌었음
 - 현대 군대조직은 더 이상 전쟁만을 위해서도 또 전투만을 본업으로 하는 집단으로 간주될 수 없고, 군대조직은 국가안보의 도구이면서 사회조직의 하나로서 기능하게 되는 변화를 겪게 되었음(김범수a, 2015: 5-8)
 - 이런 관점에서 민군관계는 일반시민사회와 군대사회로 정의되고 민과 군의 상호이해와 보완적 관계의 형성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음(김범수a, 2015: 8)
- 민·군관계는 민과 군의 양자 간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오랫동안 민군관계는 정치학적인 측면에서 이해되고 설명되어 왔음(김범수a, 2015: 5)

- Jacque Van Droom(1971)은 그동안의 민군간의 영역에 처음으로 군과 국민의 관계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제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군 대집단과 민간집단 간의 상호작용 상태 및 내용을 넣었지만, 군과 지역사회와의 제행위자의 관계가 쉽게 분석되지 못하였음(허훈, 2008: 31)
 - 허훈(2008: 31-33)은 집단간 교류협력이론(교환모형, 협상모형, 협과정 모형, 공동생산모형 등)은 군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국면의 어느 한 쪽 면만을 설명하는데 유용하지만, 모든 국면을 설명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음
 - 또한, 허훈(2008: 34)은 교류협력에 대한 제이론의 분석을 통해 군과 지역사회의 교류양상인 상호탐색적 교류, 상호지원, 공동의 이용, 정책의 협의 및 공동생산 등 협력의 동기 및 신뢰관계의 성숙에 따라 일종의 시간틀에 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였음

<표 2-6> 민·군협력관계 이론적 접근

교류유형	내 용
상호탐색적 교류	민군 쌍방간의 행사등에 대한 지원 혹은 참가 등의 형태
상호지원	재해, 환경복구 및 상하수도 지원, 장병거주시설 개선, 자원봉사 등
자원의 공동이용	민군간의 우월한 자원의 공동이용 혹은 시설개방 등의 형태 예) 육군병원 등의 진료서비스의 민간제공 등
정책협의	민이 제기하는 민원 등의 해결을 두고 군과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대응
공동생산	군과 민간이 상호자원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생산적인 활동 예) 군의 비무기체계 전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기업과의 기술교류, 정보화 교류 등

② 민·군 협력에 관한 대표적 사례 : 철원군

- 철원군은 2017년 7월에 철원군에 소재한 군사시설과 군 훈련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개발 및 주민피해 구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원군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지역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음(동 조례는 5개 조항으로 구성)
 -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사항 이란 ①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②토양 및 수질, 분진 등 환경오염 피해, ③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직·간접적 요인에 의한 피해 등임
 - 또한, 지원의 범위와 대상은 ①피해지역 및 주변지역 생활환경 정비 사업, ②피해지역 마을 및 피해대책 추진 민간단체 활동(군사시설 등으로 제한된 지역 규제 완화 건의활동, 군 훈련에 따른 피해대책 건의활동, 군 훈련에 따른 피해 예방 및 지역개발 촉구 토론회 활동, 군 훈련에 따른 주변지역 안전대책 개선요구 활동, 피해지역 대책관련 교육 및 연수 등) 등임
- 6.25전쟁 최대 격전지였던 철원군에는 3사단, 5사단, 6사당, 8사단, 15사단, 5군단 등 5개 사단과 1개 군단이 주둔해 있음(김범수, 2015a: 17)
 - 병력 규모는 26,158명으로 3개 사단급에 해당됨
 - 군 장병을 포함한 민군인구 대비 장병의 비율은 35.4%
 - 행정구역의 99.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군부대 사격장은 전차사격장 4개소, 공용화기 사격장 8개소 등 12개소에 750ha에 이룸
 - 전차 사격장 훈련일수도 연간 230일에 이르며, 소음과 교통피해 또한 적지 않음

<표 2-7> 철원군 민군협력사업 현황(2010~2015년)

(단위 : 백만원)

교류유형	교류사업	예산
군 지원 협력사업	3사단 7초소 이전	50
	공덕비 이전 및 민통초소 정비	22
	군인아파트 육아시설 CCTV 설치	9
	장병 직영입소에 따른 6사단 신교대 지원	147
	3사단 신병교육대 주차장 정비 공사	250
	수색대대 포장공사	700
	3사단 군장병 대기소 신축공사	210
	각종 현수막, 홍보간판, 출입증 제작지원 등 4건	1.9
	6사단 양지리 초소 CCTV설치 지원	2
	5군단 6.25전사자 평화의 쉼터 조성 및 강의실 지원	20
	5사단 영농안전확보 펜스 자재 및 경고간판 지원	63
민군관 교류협력 활성화	백골 한마음축제/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지원	116
	3,6사단 화강 열음마당 행사지원	1.5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모범사병 초청행사, 자매부대 방문행사, 모범부사관 선진지 연수, 전입신병 환영행사, 군장병 영화관람 등 9건	87
	6사단 출사근부대 방문의 날 행사지원	8
	3,6사단 신교대 면회행사 지원	74
	한마음행사, 자매부대 방문, 추억의 나무심기	64
	군부대 위문: 명절 및 창설기념일	
	명예군인패, 취임축하패 수여	
	모범사병 초청 군정홍보 및 격려	
	군장병 영화관람 지원	
	모범 부사관 선진지 견학 추진	
정책협의	민관군 공동발전 상임위원회 개최	-

자료 : 김범수(2015a: 18), 재인용

2) 민·관·군 협력관계의 의의

(1) 민·관·군 협력관계의 개념

- 민·군 간 협력관계에서 더나가 민·관·군 협력거버넌스는 군과 공공부문 및 민간사회의 상호의존적 협력 관계로서 ‘원-원(win-win model)’이라는 개념적 성격을 갖음(최병학·류상일, 2008: 2)
 - 이러한 상호의존적 관계는 민간사회(시민사회)와 공공부문 및 군대간에 서로를 연계하면서 상호간 협력하는 관계를 지칭하는 것이며, 이러한 상호의존적 관계는 동반자 관계(파트너십)로 논의될 수 있음
 - 특히 서로 다른 목적을 지닌 조직과 영역을 시스템적 측면에서 관계를 규정하는 협력거버넌스 체계는 조직관계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상호 의사소통 및 협력 행위를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기준과 규율을 기반으로 삼음
- 민·군 협력 관련 거버넌스는 국가(정부)를 단순히 안보서비스를 전달하는 기계적 존재가 아니라 국가사회 전체의 공공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독립된 정치적 활동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비인격화된 계서적(階序的) 통치에 의한 국가(정부)가 아니라 사회전반의 시민, 단체, 기관이 광범위하게 참여를 통해 국가사회와 미래경영을 위해 함께 네트워킹하는 보다 발전된 시스템을 의미함(최병학·류상일, 2008: 15)

(2) 민·관·군 협력거버넌스의 유형

- 지역협력정책 추진과 관련된 민관군 협력거버넌스의 유형은 시민사회와 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모두 6가지 형태의 지역협력정책 모델이 있음(최병학·류상일, 2008: 20-22)

- 첫째는 일방적 지역협력정책 거버넌스인데, 이는 지역협력정책 당국이 일방적으로 자발조직을 통제하고자 할 경우에 나타남
 - 이러한 상황은 지역협력정책 당국이 자발적 조직을 무시하는 자세에서 아직 탈피하지 못한 상태이거나, 자발적 조직 자체의 성향과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나타나게 됨
- 둘째는 특혜적 지역협력정책 거버넌스로서, 이는 특정 자발적 조직에게는 정책참여를 허락하면서 여타 자발적 집단에 대해서는 정책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거버넌스 임
 - 이러한 유형의 거버넌스는 자신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을 유도하려 들거나, 특정 자발적 단체와의 거래가 있거나, 특정 자발적 단체의 세력이 강해서 그들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불가피하게 그들을 참여시키는 경우에 형성됨
- 셋째는 집합형 지역협력정책 거버넌스인데, 이는 지역 내에 어느 정도 다양한 자발조직이 형성되어 있고, 자발조직의 참여에 대한 지역협력정책 당국의 자세도 대체로 개방적일 경우에 형성되는 지역협력정책 거버넌스임
 - 이러한 유형의 특징은 지역협력정책 당국과 자발적 조직과의 개별적 상호작용은 이루어지나 자발적 조직들간의 의사소통과 연결은 미흡함
 - 지역협력정책 당국을 중심으로 자발적 집단이 연결되어 하나의 정책 참여 집합을 이루는 가운데 정책의 주도권을 지역협력정책 당국이 행사하게 되며, 자발적 조직들은 자기조직의 사안에 대한 참여만 허용됨

- 넷째는 별거형 지역협력정책 거버넌스인데, 이는 자발적 집단간의 의사소통네트워크는 열려 있으나, 지역협력정책 당국의 정책네트워크는 열려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함
 - 이러한 상황은 시민사회의 발전 수준에 지역협력정책 당국의 수준이 못 미치는 경우에 흔히 발생하는 거버넌스임
- 다섯째는 집중형 지역협력정책 거버넌스로서, 이는 지역협력정책 당국이 정책을 주도하는 점에서 집합형 거버넌스와 같으나 자발적 조직 간의 의사소통의 창구가 열려 있다는 점이 다름
 - 이러한 유형의 지역협력정책 거버넌스는 시민사회가 상당히 성숙하여 NGO들의 수준이 높고 상호 협력할 자세가 되어 있을 경우에 발생함
 - 지역협력정책 당국의 경우에도 다양한 NGO들과의 협력을 추구하고 그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그다지 큰 제약을 가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임
- 여섯째는 네트워크형 지역협력정책 거버넌스인데, 이는 지역협력정책 당국과 자발적 조직이 함께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가되며, 자발적 집단간의 의사소통과 정책연대가 활발하다는 점에서 집합적 지역협력 정책 거버넌스와 구별됨
 - 이 경우 지역협력정책 당국은 정책주도자의 역할보다 정책네트워크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3) 민·관·군 협력관계의 대표 사례 : 계룡시

- 계룡시는 1983년 국방부 620사업에 의해 1989년 신도안지역에 3군 본부가 이전하여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었고, 2003년 계룡시로 승격(9월

19일) 되었음

- 2017년 말 기준 계룡의 인구는 43,967명으로 남자 21,834명 여자 22,133명
 - 계룡시 전체 면적은 60.7km²로 1개 동, 3개 면, 14개 법정리, 449개반으로 구성됨
- 계룡대는 행정구역상 신도안면에 위치하며 군관사를 포함한 계룡대 지역의 면적은 19.83km²로 계룡시 전체 면적의 33%를 차지하며, 이중 군사보호구역은 29.75km²이고, 계룡대 근무인원과 군가족의 인구는 약 2만명 정도로 추산됨
- 계룡대 조성은 육해공군 3군 통합기지로서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군의 통합적 운영과 방어를 확보하고 적 측면에서 통합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토 측면에서 균형발전을 위해 1983년 국방부 ‘6·20계획’으로 추진되었음
 - 계룡대와 관련된 주요 문화시설로는 800석 규모의 대강당, 작은도서관 등이 있으며, 실내체육관·수영장·목욕탕·골프장·탁구장 등 체력단련장이 있고, 무궁화회관 및 계룡대지구병원 등 복지 편의시설이 있음
- 계룡대를 중심으로 하는 민·관·군 협력사업의 추진은 [계룡시정책협의회]를 통해 추진하고 있음
- [계룡시정책협의회]는 “계룡시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2004년 5월 제정)”에 운영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원의 수는 공동위원장 2인(계룡대근무지원단장, 시장)을 포함한 30인(계룡대 관계자 9인, 시 관계공무원 12인, 시의원 3인, 주민대표 4인)으로 구성됨
 - [계룡시정책협의회]의 운영은 매분기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주요

사안 발생시 수시 소집함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본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전 실무협의회 개최하고, 2018년 10월 25일 현재 20회의 운영되고 있음

<표 2-8> 계룡시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 주요정책 추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민·관·군 상호협조와 유대를 강화하고자 계룡시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계룡대”라 함은 육·해·공군본부 및 계룡대 근무지원단 등을 말한다.
제4조 (기능) 협의회는 지역사회발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정 주요정책 수립 및 장·단기 발전계획(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한 의견 수렴 2. 재난·재해 통제 및 상호지원 3.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과 환경시설 건립 5. 광역 상·하수도 관련사항 6. 도로 및 교통여건 개선 및 확충 7.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 8. 계룡대시설의 계룡시민 개방이용 및 설치 관련사항 9. 계룡시 및 계룡대 주요행사 상호 지원사항 10. 기타 군인 및 군인가족 이해 관련사항 11. 그밖에 시정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협의회는 계룡시 및 계룡대 각 1인의 공동위원장과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계룡대근무지원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위원은 시장이 민·관의 위원을, 단장이 계룡대의 위원을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계룡시 의회의원 2. 계룡시발전협의회장 등 주민대표 3. 시청 관계공무원 4. 계룡대 관계자
제9조 (간사)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 및 협의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2인을 두되, 계룡시측의 간사는 민군담당이, 계룡대측의 간사는 계룡대근무지원단 정책협의회 업무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2.11.1>
제10조 (협의사항 처리) 계룡시와 계룡대는 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계룡시 민·관·군 협력사업 중 ‘계룡문화축제’ 개최와 ‘2020세계군문화엑스포’ 유치는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계룡시와 육군본부는 지난 2007년부터 계룡군문화축제와 지상군 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매년 평균 100만명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 국제행사 개최 역량을 키워왔음
 - 2020년 9월 18일부터 10월 4일까지 17일간 계룡대 비상활주로 및 계룡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지난 2016년 정부로부터 군문화엑스포에 대한 국제행사 승인을 받은 이후 조직위원회 구성 및 기본계획안을 확정했음

3. 선행연구의 검토

-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한 연구는 연구주제의 한계성 및 연구대상에 대한 실태분석의 한계로 인해 선행연구가 충분하지는 않은 상태임
 - 연구분야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경제적인 관점, 법·제도적인 개선, 갈등관리 관점, 그리고 민·관 상생협력 관점이 그것임

1) 경제적인 접근

- 먼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개인 재산권 및 지역개발 제한과 관련된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기존 연구들을 보면 다음과 같음(박성범, 2014: 35-36)
 - 고재학(2008)은 경기도 연천군의 사례를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 등 경제적 손실을 추정하였음
 - 경기연구원(2009)과 국토연구원(2009)에서는 경기북부 및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군사작전 환경변화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조정 및 개발전략을 제시

- 박영만(2004) 및 허훈(2003) 등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재산권 보상에 대한 정책적 조치를 주장하였음

2) 법 및 제도적인 접근

-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된 법제도적 개선과 관련된 관점으로 접근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음
 -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전에는 미비점이 많아 비교적 선생연구가 많았으나, 통합제정 이후 감소하였는데, 소성규(2008)는 현행 법규의 평가를 통해 제도적 개선과 제로 ‘관할권 행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특별법 제정과 행정체계의 정비’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음(박성범, 2014: 36)

3) 갈등관리론적 접근

-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변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관리방안으로 접근하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음
 - 강소영·강한구(2013)는 군사시설의 조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민-군 갈등의 유형 및 유발요인을 분석하여 국민과 군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고, 부형욱(2012)은 군사시설과 관련한 민-군 갈등의 현안문제와 갈등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음(박성범, 2014: 36)
 - 박성범(2014)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한 민-군 갈등 실태분석 을 통해 ‘군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군-지역사회간 상생차원의 대책이 요구됨(박성범, 2014: 34)’을 지적 하였음
 - 심재정(2017)은 접경지역지원법과 군사규제와의 관계, 군사시설보호구

역 운영과 갈등실태 등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군사규제 및 민-군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군에서는 변화된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민-군이 상생할 수 있는 지역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심재정, 2017: 203)’고 지적하였음

- 최용환(2009)는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민군관계에 대한 현안을 검토한 결과, ‘중앙정부는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하며, 지자체는 군관련 부서와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군은 군행정의 개선과 민원시스템 개선, 주민들 역시 객관적 데이터에 의존한 합리적 문제제기라는 원칙에 동의할 것(최용환, 2009: 61)’을 제언했음

4) 민·관·군 상생협력 및 협력거버넌스 관점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민·관·군 간의 상생협력 및 협력거버넌스 구축방안에 대해 접근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음
 - 윤성호 외(2007)는 경기북부지역의 개발을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력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김범수(2015a)는 강원도 접경지역 규제관련 연구를 통해 접경지역의 현안과 과제, 민-군 협력 방안 등을 제시 했음(심재정, 2017: 203)
 - 허훈(2008)은 군과 지역사회의 협력적 관계에 대한 이론을 조직간 협력 이론에서 찾아보고, 군과 지역사회의 교류유형을 상호 탐색적 교류·상호지원·공동이용·정책협의·공동생산으로 추출하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군과 지역사회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국가가 군사시설에 대한 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관점에 의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허훈, 2008: 28)’고 제언했음
 - 최병학·류상일(2008)은 그동안 간헐적으로 검토해 온 민·군관계 나아가

민·관·군의 협력 관계를 바람직한 형태로 새롭게 재구성할 목적으로 일시적인 협력관계가 아닌 시스템적 측면에서 검토 하였음

- 결론적으로 충남 서해안지역 유류유출사고 사례에서 나타난 민·군·관 협력거버넌스의 분석을 통해 ‘협력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협력기반 여건 조성, 중간조직(매개조직)의 마련, 상시적 협력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가동, 협력거버넌스 주체간 활발한 네트워크 연계, 각각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적 운영, 민·군·관 협력거버넌스 평가시스템 구축 등’ 을 제시하였음

3장

자운대 및 민·관·군 협력 현황

1. 자운대 현황
2. 대전시-자운대 간의 협력 현황

3장 자운대 및 민·관·군 협력 현황

1. 자운대 현황

1) 자운대의 일반 현황

- 대전광역시는 2016년 6월 30일 현재, 총 19.9km²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보유하고 있음
 - 대전시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은 17개 시·도 중에서 제주와 울산에 이은 3번째로 적은 면적이며, 이중 통제보호구역 3.5km², 제한보호구역 14.8km², 비행안전구역 1.6km²임
 - 여타 시도에 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면적이 적은 규모이나 자운대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전시는 군사안보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음



- 자운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대한민국 국군의 3군 통합 군사 교육 및 훈련 시설 가운데 하나이며, 주둔지 내에 있는 1개 사령부와 4개 학교기관, 국군대전병원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임
 - 자운대는 국방부 직속부대이며, 계룡대, 상무대, 기타 잡다한 육직부 대들 등과 함께 대표적인 후방 기행부대(기행부대 : 기술행정부대의 준말) 중 하나
- 1992년 7월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던 육군통신학교(현 육군 정보통신학교)가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군사교육 기지 조성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육군·해군·공군대학(현재는 합동군사대학교로 통합), 국군간호사관학교, 군의학교, 육군교육사령부 등이 차례로 이전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음
- 대전시 자운대 지역에 주둔하는 17개 군(軍)부대의 근무지원을 통합 수행하는 ‘자운대 근무지원단’은 2016년 2월1일 창설되었으며, 자운대에는 합동군사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육군교육사령부 등 국방부 직할 및 육군 소속 18개 부대가 터를 잡고 있음
- 각급 부대 장병과 후반기 특기병 교육생 등 1만여 명이 상주하고, 교육·연구·행정·전투지원·병원 등 다양한 기관이 넓은 지역에 분포돼 있으며, 대령이 지휘하는 자운대 근무지원단은 계룡대 근무지원단 예속 부대로, 참모부서인 행정처와 관리대대·수송대대·의무지원대·현병대 등으로 구성됨

<표 3-1> 자운대 주둔부대 현황

구 분	부 대
육군(6)	교육사령부, 종합군수학교, 정보통신학교, 전투지휘훈련단, 제1115공병단, 제53군수지원단
국직(12)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정신전력원, 국군간호사관학교, 국군의무학교, 국군대전병원, 군의학연구소, 국방지형정보단, 자운대근무지원단, 제56정보통신대대, 위성관제대대, 제332군사안보지원부대, 복지단

<표 3-2> 자운대 인구 현황(일평균활동인구 : 22,570명)³⁾

현 역		군무원	군가족	교육생	상인 / 교원
간부	병				
2,602명	9,358명	478명	4,900명	5,000명 (연간: 10만명)	232

<표 3-3> 자운대 주거 현황⁴⁾

구 분	관 사	간부숙소 (영외)	교육생 간부숙소	
			영내	영외
세대(실)	87개 동 1,651세대	25개 동 751세대	10개 동 563세대	17개 동 974세대
건립연도	92~13	92~07	95~13	92~98

3) 교육생 등 유동인구 포함시 연 122천명, 2019년 7월 현재 학교는 자운초등학교(33개반, 657명), 자운중학교(6개반 127명)

4) 9개 단지 139개 동 3,933세대(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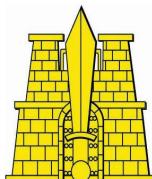
<표 3-4> 자운대 복지시설 현황⁵⁾

구분	중앙 복지시설			부대 복지시설			체육관
	쇼핑센터	수영장	체력단련장	자운 레스텔	창조 레스텔	호국 회관	
건립연도	95년	96년	05년	98년	04년	96년	96년
규모	2,504평	1,954평	전평2,370평 대지7만2천평	1,299평	1,013평	1,343평	1,830평
운영인원	21명	14명	40명	16명		3명	
연 매출액	116.5억	4.5억	43억	14억			
비고	직영(1) 허가(52)	직영(1) 허가(3)	9홀, 그늘집	직영(객실2, 목욕탕2) 허가(18), 복지시설(3), 공실(4)			

2) 자운대 소속 주요부대

- 자운대는 3군 통합교육 및 훈련시설들이 통합적으로 공간적으로 모여 있는 ‘집합부대’ (Military Corps Cluster)이며, 이 중에서 육군교육사령부 · 합동군사대학교 · 국군간호사관학교 등은 교육 시설이며, 국군대전병원 · 국군의무학교 등은 의무시설이고, 육군제5군수지원사령부 및 육군제2작전사령부의 예하부대들은 일 반군부대 또는 훈련시설로 분류됨
 - 자운대(자운동) 지역의 주요 주둔부대들의 마크(심볼, 로고)를 보면 다음과 같음(인터넷자료 검색 결과)

5)쇼핑센터(1), 수영장(1), 체력단련장(1), 회관(3), 체육관(1)

합동군사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교육사령부
		
군수사령부(반석동)	육군종합군수학교	육군정보통신학교
		
전투지휘훈련단	국군의무사령부대전병원	국군의무학교
		
국방지형정보단	제53군수지원단	자운대근무지원단
		
제1115공병단	국군복지단대전지원본부	국방과학연구소(수남동)
		

○ 합동군사대학교

- 합동군사대학은 2011년에 합동성 강화와 국방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육·해·공군대학을 통합해서 창설한 곳으로 군인장교를 교육하는 합동성 연구와 교육메카임
- 최근 국방부 산하에 국방어학원(2012. 12. 1), 국방정신전력원(2013. 12. 1), 합동참모대학(2014. 12. 12)이 합동군사대학교 산하로 들어오면서 규모가 더 커졌음

○ 국군간호사관학교

- 국군간호사관학교는 1996년 8월 22일 대구에서 대전 자운대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렀으며, 대한민국 육·해·공군 정예 간호장교 양성의 임무를 지닌 특수목적대학 임

○ 육군교육사령부(‘창조대’)

- 육군교육사령부는 반석동시대(1982. 6. 16 ~ 2004. 10. 22)를 거쳐 자운대시대로서 현재 위치에 이르고 있음
- 국방부 소속 육군본부 산하의 기관으로써 육군훈련소, 자운대, 육군학생군사학교 등 교육기관 관리업무를 하는 기관임
- 존재 목적은 정예육군 건설을 위해 현용전력을 극대화하고 미래전력을 창출하는 것인데, 육군을 위한 인재를 교육하는 기관임
- 업무로는 우선 전투발전 업무체계 정립 및 발전을 위해 전투실험을 하거나 연구교범을 작성하고 육군의 교육훈련 발전 및 지원하는 업무이며, 또한 육군교육사령부 소속 학교들을 통제 및 감독하고 최근 시대흐름에 맞게 과학화 전투훈련, 정보화 기반체계를 구축 및 보강하는 것이 주요임무임

○ 육군종합군수학교

- 육군종합군수학교는 육군교육사령부 산하의 기관으로, 1948년 창설 이래 1998년 6월 5일 현재 위치로 이전에 이르기까지 연간 25,400명의 정예 군수요원을 배출하는 육군 최대의 군사보수교육기관이며, 산하에는 군수교육단, 병기교육단, 병참교육단, 수송교육단을 두고 있음
- 특히 육군의 장비, 탄약, 급식, 유류, 수송 등의 전투력 운용 및 유지와 기본적인 부대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지원하는 군수요원 육성을 위한 체계적, 전문적 교육기관임

○ 국방정보본부 국방지형정보단

- 국방정보본부란 국방부 직할의 국군 정보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창설된 정보기관 중의 하나임
- 최근 2017년까지 국방지형정보단이라는 기관이 소속되어 있었는데, 국방지형정보단이란 영상과 지형정보를 융합한 3차원 정보공간을 구현해서 합동작전에도 지원하고 관련 지도도 제작 가능하게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곳임
- 대전광역시 자운대에 위치한 부대로 지형지물정보를 조사수집하여 분석하고 지도 등 인쇄매체 및 비인쇄매체로 변환하여 합참 및 각 군에 배포, 제공하는 임무를 맡고 있음

○ 자운대근무지원단

- 자운대 지역의 행정지원부대들을 폐지, 개편하여 2015년 12월 28일에 창설되었는데, 편제는 계룡대 근무지원단의 예하부대로 육군교육사령부 현병대와 통합근무지원대대, 육군정보통신학교 교도대와 수송대, 육군종합군수학교 본부대와 수송대, 합동군사대학교 근무지원대,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의무지원근무대 등을 통폐합하여, 자운대 지역 17개

부대에 대한 근무지원을 담당함

- 단 본부는 합동군사대학교에 위치하며, 관리대대 시설대와 지원대 근무1소대는 구 교육사 근지대대에, 근무2소대는 군수교에 있고, 수송대 대는 구 합동대 근무지원대와 군수교에, 헌병대는 의무학교에, 의무대는 군수교에 나뉘어져 있음

○ 육군군수사령부(‘칠성대’)

- 육군군수사령부는 육군본부 산하의 기관으로써 육군군수 관련 업무를 총괄함
- 육군에 대한 군수지원을 효과적, 능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군 군수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것이 군수사령부의 존재 목적임
- 임무로는 군수 물자 조달, 획득, 저장, 분배, 처리하고 재고관리 통제를 하고 정비 계획과 정비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임무임
- 예하 부대로는 종합정비창과 탄약지원사령부, 종합보급창이 있는데, 종합정비창은 전군의 공통장비에 대한 정비 지원을 담당하고, 탄약지원사령부는 탄약 관련 업무를 지원하며, 종합보급창은 3군에 공통되는 보급품목을 지원함

○ 국방과학연구소

- 국방과학연구소는 방위사업청 소속 기관으로써 국방에 필요한 무기 및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국방력 강화와 자주국방 완수에 기여하는 곳임
- 국방과학연구소는 병기 · 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 · 연구 · 개발과 이에 관련된 계통공학, 인간공학, 그 밖의 과학기술의 조사 · 연구, 병기 · 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의 제식(制式) 및 규격의 조사 · 연구, 국방에 필요한 무기체계와 관련된 각종 자원,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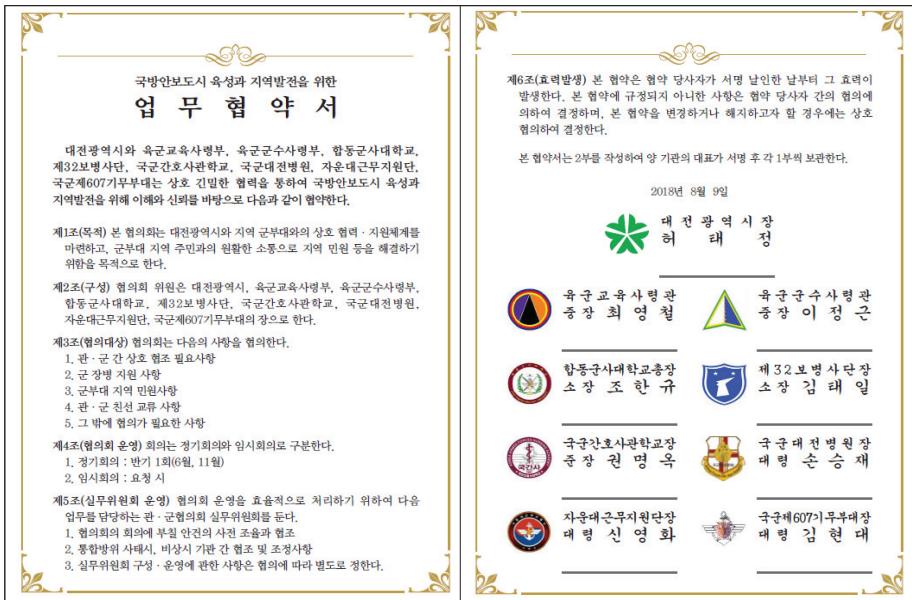
제도 및 운영의 분석·연구, 병기 및 장비의 시험제작을 위한 설계 및 설명서의 작성·검토와 시험제작품의 기술시험, 각종 병기 및 장비의 성능시험 등의 역할을 담당함

- 주요 임무는 무기체계 및 기술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기술지원을 하고, 연구위탁, 보조 지원도 하고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임무를 수행함

2. 대전시-자운대 간의 협력 현황

1) 대전시-자운대 간 협력추진 경과

- 대전시와 자운대는 관·군 상호 win-win 상생 도모를 통한 지역발전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2013년 8월 자운대 안보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MOU 체결을 시작으로 2018년 8월 『대전광역시 관·군 협의회』 협약서를 체결하였음
 - 대전광역시와 협약을 체결한 자운대 주둔 부대는 육군교육사령부 등 8개 부대임(육군교육사령부, 육군군수사령부, 합동군사대학교, 육군제32보병사단, 국군간호사관학교, 국군대전병원, 자운대근무지원단, 국군제607기무부대)
 - 협약의 내용은 협약 목적, 구성, 운영, 실무위원회 운영 등 6개 조항



2) 대전시-자운대 간 협력사업 추진 실적

- 대전시와 자운대간의 2018년 「관·군 협의회」에서 32개의 협력 및 요청사업 있었음
 - 합동군사대학교외 6개 부대에서 요청한 사업은 총24건(도로·보도블럭·현수막·계시대의 보수·교체 등 기반시설 보수 15건, 운동장 인조잔디·방범 CCTV·옥외광고판·공영자전거 편의시설 설치 9건)
 - 총24건에 대하여 관련부서 검토결과 불가(9건), 수용(6건), 일부수용(5건), 진행(2건), 장기검토(2건)로 추진되었음

<표 3-5> 협력·요청사업 총괄

요청기관	계		완료			진행	
			수용	불가			
대전시	32	8	18	7	9	-	5 1
군부대		24		11		9	4

<표 3-6> 대전시 요청사업 (18년 전반기)

연번	요청부서	내 용	관련기관	검토결과
1	비상계획담당	- 자운대 내 가정「제2전쟁 기념관」 건립 검토 요청	자운대근무지원단	진행
2		- 전군 제70주년 특별 기념행사 추진 협조	전 부대	완료(수용)
3	공연예술담당	- 2018년 시립예술단 군부대 공연/15회 6,400여명 초청	전 부대	완료(수용)
4	체육지원담당	- 대전시티즌 홈경기 군부대 장병(사병) 초청 입장	전 부대	완료(수용)
5	에너지정책담당	- 자운대 부지 내 태양광시설 설치 이행협조	자운대근무지원단/군수사령부	완료(일부수용)
6	과학정책담당	- 2018년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행사 축하공연 요청	자운대근무지원단	완료(수용)
7	아동담당	- 2018년 제96회 어린이 날 큰잔치 축하공연 요청	자운대근무지원단	완료(수용)
8	문화산업담당	- 영화.드라마 촬영장소 협조	전 부대	완료(수용)

<표 3-7> 군부대 요청사업(1~9/전반기)

연번	요청부서	내 용	관련기관	검토결과
1	육군교육사령부	- 자운대 내 보도 블럭 노후화·주민통행 불편 초래	유성구건설과	완료(수용)

2		- 군 장병에게 문화예술 공연 관람기회 제공	문화예술과	완료 (수용)
3	육군탄약사령부	- 장동 고개길 도로공사 자연 으로 주민불편	대덕구건설과	완료 (수용)
4	제32보병사단	- 우수 신병 수료 병사에게 시장 표창 수여	비상대비과	완료 (수용)
5	합동군사대학교	- 합동대 내부 해군·공군대학 축구장에 인조 잔디 설치	체육지원과	완료 (불가)
6	육군군수사령부	- 보도블럭 노후화/지반침하로 인한 주민 통행불편	유성구 건설과	완료 (일부수용)
7	53군수지원단	- 자운대내 보도블럭 노후화 및 지반침하로 불편	유성구 건설과	완료 (수용)
8		- 자운대네거리~제2정문, 우수 / 오수관로 준설	유성구 건설과	완료 (불가)
9		- 자운대 네거리 ~ 체력단련 장, 야간 조명등 설치	유성구 건설과	완료 (수용)

<표 3-8> 군부대 요청사업(10~24/후반기)

10	53군수 지원단	자운대 내 보도블럭 교체	유성구 건설과	완료 (일부수용)
11		자운대 내 우수오수관로 준 설	유성구 건설과	완료 (일부수용)
12	국군간호사관학 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건물 옥외 전광판 설치	시 공보관실	완료 (불가)
13	자운대근무 지원단 합동군사대학교	자운대지역 방범 CCTV 추가 설치	유성구 안전총괄과	진행
14	자운대 근무지원단	노후 현수막 게시판 정비	유성구 도시과	완료 (불가)
15	자운대 근무지원단, 합동군사대학교	수운교 일대 솔밭공원 체육 기자재 관리	유성구 문화관광과	진행

16	자운대 근무지원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대책강구	유성구 교통과	완료 (불가)
17	자운대근무 지원단,합동군사 대학교	자운대지역 주도로 아스팔트 포장	시 건설도로과	완료 (불가)
18	자운대 근무지원단	인라인스케이트장 우레탄 보 수	시체육지원과	완료 (불가)
19	합동군사대학교	공영자전거 타슈 스테이션 설치 및 비치	시 건설도로과	진행 (장기검토)
20		합동대 내부 축구장에 인조 잔디 설치	시 체육지원과	완료 (불가)
21	교육사령부	자운대 내 보도블럭 교체(53 군수 지원단 중복)	유성구 건설과	완료 (일부수용)
22		교통신호체계 정비 및 자운 초교 후문 횡단보도 안전대 책	대전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유성구 교통과	완료 (불가, 일부수용)
23		군인가족 평생학습교육 지원	청년정책담당관	완료 (일부수용)
24	자운대 근무지원단	탄동천 산책로 설치	유성구 건설과	진행 (장기검토)

3) 유성구-자운대 간 협력사업 추진 실적

- 유성구는 자운대에 거주하는 군인과 가족의 독서·문화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해 3억원을 들여 자운대 호국복지센터 1층에 165m² 규모로 ‘자운마을작은도서관’ 을 2012년 9월에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자운마을 작은도서관 조성에는 구비 2억 3천만원 등 총 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11명의 민간 운영위원을 통해 주민 참여형 식으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음

- 전입신고 및 제증명 발급 등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신성동 주민센터 자운대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음



4) 지역주민-자운대 간 협력추진 실적

- 유성구는 2018년 10월 19일 저녁 6시 30분 계룡스파텔 잔디광장에서 '군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를 개최했음
 - 음악회는 국화전시회 기간 군 문화공연과 지역예술인 공연을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유성구와 육군인사사령부가 함께 마련했음
 - 대전MBC 김경섭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육군 군악의장대대, 성악가 김

호중, 포크가수 하남석, 걸그룹 힌트, 소프라노 신향숙, 퓨전국악 육소
형이 출연했음

- 지역주민과 자운대간의 협력과 상생발전을 위해 자운대 「민·군화합페스티벌」을 개최하였음(2019.4.26.~27)
 - 민·관·군 유대강화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와 지역 군부대(자운대)가 함께하는 軍 문화축제 개최
 - 행사기간 중에 전차와 장갑차 탑승, 드론소개·전시, 현병 MC 시승식, 군견운영 시범·분양, PX물품판매 등 시민 체험형 군문화부스가 인기를 끌은 것으로 나타났음

비전

목표市와 軍이 함께하는 CIVIL 축제군문화를 체험하는 MILITARY 축제대전을 알리는 INFORM 축제

세부
추진
과제

과제 1 대전광역시와 군부대가 함께하는 소통·화합의 장

- 시민과 자운대 군장병이 함께하는 개막식 및 이벤트
- 품격있는 군악연주회 및 의장대 시범 공연
- 생활동호회 및 밀리터리 매니아 참여

과제 2 군문화를 미리 체험해보는 청소년 교육의 장

- 직접 보고, 만지고, 체험하는 과학화훈련(서버이벌 게임) 체험
- 군 현병 오토바이, 장갑차 등 탑승 체험
- 군 기동/화력/통신장비, 드론 소개 및 전시
- 신병 부모 초청 및 부대개방행사
- 여군(현병, 특전사 등) 홍보

과제 3 국방안보도시 대전을 알리는 홍보의 장

- 대전방문의 해 맞이 시 및 5개 자치구, 육군 홍보관 운영
- 6.25전쟁시 대전지역 사진 전시회
- 국방정책 국민홍보, 안전문화 도시 홍보

4장

민·관·군 상생협력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3. 분석결과의 시사점

4장 민·관·군 상생협력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 자운대와 지역주민 및 지방정부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인식도를 조사하였음
 - 조사는 2019년 5월 1일부터 8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대면조사를 실시하여 131부를 수거하고 분석하였음
- 설문지의 주요 내용은 ① 자운대에 대한 일반적 이미지, ② 자운대 편의시설 이용 경험, ③ 자운대 행사참여 경험, ④ 지역발전을 위한 자운대의 기여부문 등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
- 설문조사에 참여한 131명의 개인특성을 살펴보면
 - 남성이 55명(42.0%), 여성이 76명(58.0%)이 참여하였음
 - 연령은 20대 및 20세 이하가 33명(25.2%), 30대가 20명(15.3%), 40대가 27명(20.6%), 50대가 20명(15.3%), 그리고 60대 이상이 31명(23.7%) 임
 - 거주지별로는 신성동이 123명(93.9%), 축목동이 8명(6.1%) 임
 -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가 27명(20.6%), 고졸이 20명(15.3%), 전문대포함 대졸이 54명(41.2%), 대학원 졸이 30명(22.9%) 등임
 - 직업별로는 일반 직장인이 33명(25.2%), 전업주부가 36명(27.5%), 학생이 33명(25.2%), 자영업이 20명(15.3%), 무직이 9명(6.9%) 등임
 - 거주기간별로는 10년 이하가 34명(26.0%), 11~15년이 29명(22.1%), 16~20년이 37명(28.2%), 21년 이상이 31명(23.7%)

<표 4-1> 설문 참여자의 개인별 특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성 별	남성	55	42.0
	여성	76	58.0
연 령	20대 이하	33	25.2
	30대	20	15.3
	40대	27	20.6
	50대	20	15.3
	60세 이상	31	23.7
거주지	신성동	123	93.9
	축목동	8	6.1
학 력	중졸이하	27	20.6
	고졸	20	15.3
	대졸(전문대포함)	54	41.2
	대학원 졸	30	22.9
직업	직장인	33	25.2
	전업주부	36	27.5
	학생	33	25.2
	자영업	20	15.3
	무직	9	6.9
거주기간	10년 이하	34	26.0
	11-15년	29	22.1
	16-20년	37	28.2
	21년 이상	31	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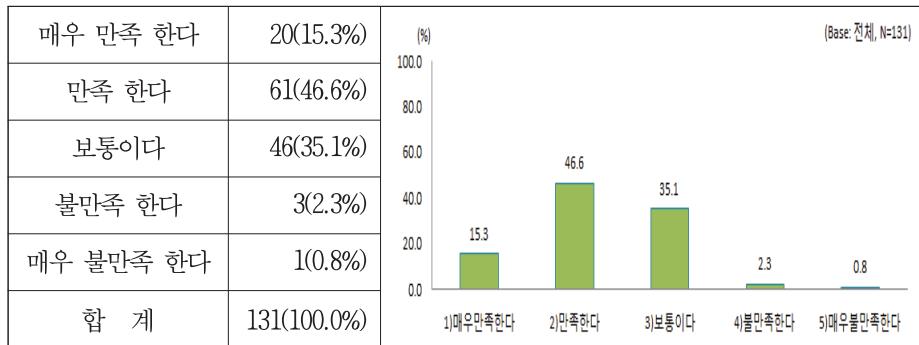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1) 자운대의 이미지

- 자운대에 대한 주변 지역주민의 일반적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자운대 인근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만족여부를 물어본 결과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자운대 지역주민의 생활만족도가 전체 응답자 131명 중 81명(61.9%)이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3%만이 불만족하다고 응답했음

- 즉, 자운대 인근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131명 중 매우 만족이 20명(15.3%), 만족이 61명(46.6%), 보통이 46명(35.1%) 등으로 나타났음

<표 4-2> 자운대 주변 생활의 만족도



- 남성 응답자(69.1%)가 여성 응답자(56.6%)에 비해 자운대 주변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음
-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 응답자가 각각 70.4%와 75.0%로 자운대 주변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60대이상 응답자는 48.4%로 낮게 나타났음
-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자운대 주변 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중졸이하 응답자는 51.8%였으나, 대학원졸 응답자는 73.3%임
- 직업별로는 전체 직업군 간에 큰 차이 없이 60%대로 자운대 주변 생활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음
- 거주기간별로는 기간별 큰 차이는 없으나, 거주기간이 10년이하인 응답자의 경우 불만족의 수준이 다소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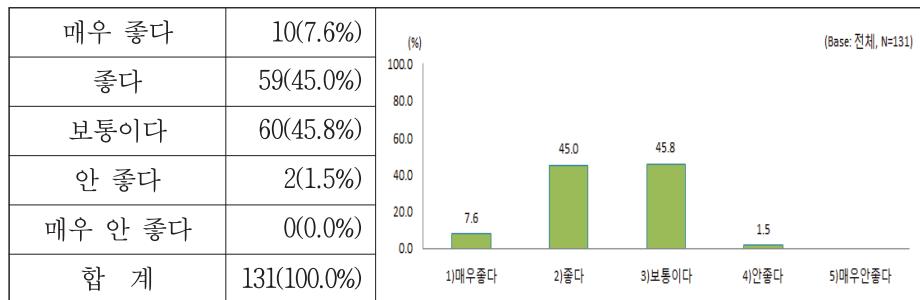
<표 4-3> 응답자별 자운대 주변 생활의 만족도

구 분	합계	매우 만족한다	만족 한다	보통 이다	불만족 한다	매우불만족한다
합계	(131)	15.3	46.6	35.1	2.3	0.8
성별	남성	(55)	16.4	52.7	27.3	1.8
	여성	(76)	14.5	42.1	40.8	2.6
연령	20대이하	(33)	27.3	33.3	36.4	3.0
	30대	(20)	10.0	50.0	25.0	10.0
	40대	(27)	11.1	59.3	29.6	0.0
	50대	(20)	5.0	70.0	25.0	0.0
	60대이상	(31)	16.1	32.3	51.6	0.0
학력	중졸이하	(27)	22.2	29.6	44.4	3.7
	고졸	(20)	30.0	35.0	35.0	0.0
	대졸 (전문대포함)	(54)	9.3	50.0	37.0	1.9
	대학원졸	(30)	10.0	63.3	23.3	3.3
거주지	신성	(123)	14.6	46.3	36.6	1.6
	축목	(8)	25.0	50.0	12.5	12.5
직업	직장인	(33)	6.1	57.6	27.3	6.1
	전업주부	(36)	19.4	38.9	41.7	0.0
	학생	(33)	27.3	33.3	36.4	3.0
	자영업	(20)	5.0	60.0	35.0	0.0
	무직	(9)	11.1	55.6	33.3	0.0
거주 기간	10년이하	(34)	23.5	35.3	32.4	5.9
	11-15년	(29)	10.3	58.6	27.6	3.4
	16-20년	(37)	10.8	51.4	37.8	0.0
	21년이상	(31)	16.1	41.9	41.9	0.0

- 자운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자운대에 대한 인상이 나쁜 것보다는 좋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음
 - 즉, 자운대에 대한 인상이 매우 좋거나 좋다는 응답은 전체 131명 중 10명(7.6%)과 59명(45.8%)으로 나타났으나, 유보를 의미하는 보통의 응답도 60명(45.%)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응답자 특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높은 반면 60대 이상은 가장 낮고, 직업별로는 학생이 가장 높은 반면 무

직자는 가장 낮고, 거주기간별로는 11~15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 4-4> 자운대에 대한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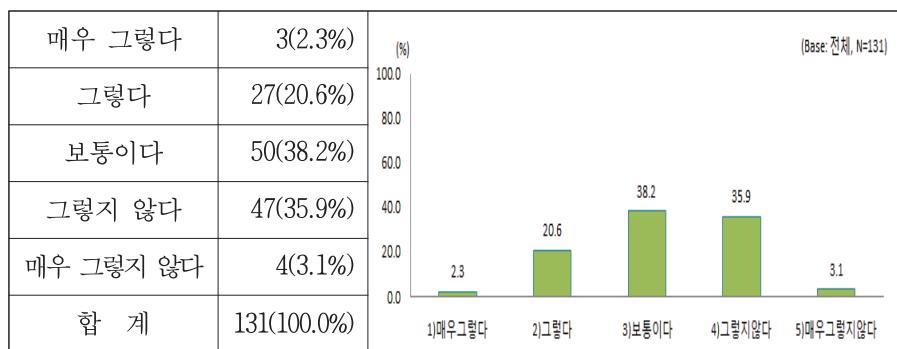


<표 4-5> 응답자별 자운대에 대한 인상

구 분	합계	매우 좋다	좋다	보통이다	안 좋다	매우 안 좋다
합계	(131)	7.6	45.0	45.8	1.5	0.0
성별	남성	(55)	10.9	47.3	38.2	3.6
	여성	(76)	5.3	43.4	51.3	0.0
연령	20대 이하	(33)	18.2	42.4	39.4	0.0
	30대	(20)	5.0	45.0	50.0	0.0
학력	40대	(27)	0.0	66.7	29.6	3.7
	50대	(20)	0.0	45.0	55.0	0.0
거주지	60대 이상	(31)	9.7	29.0	58.1	3.2
	중졸 이하	(27)	22.2	40.7	37.0	0.0
학력	고졸	(20)	10.0	45.0	45.0	0.0
	대학	(54)	3.7	38.9	55.6	1.9
거주지	대학원 졸업	(30)	0.0	60.0	36.7	3.3
	신성 축목	(123)	7.3	43.1	48.0	1.6
직업	직장인	(33)	3.0	54.5	39.4	3.0
	전업 주부	(36)	5.6	44.4	50.0	0.0
거주 기간	학생	(33)	18.2	42.4	39.4	0.0
	자영업	(20)	5.0	40.0	50.0	5.0
	무직	(9)	0.0	33.3	66.7	0.0
	10년 이하	(34)	17.6	35.3	47.1	0.0
	11~15년	(29)	3.4	65.5	27.6	3.4
	16~20년	(37)	0.0	43.2	56.8	0.0
	21년 이상	(31)	9.7	38.7	48.4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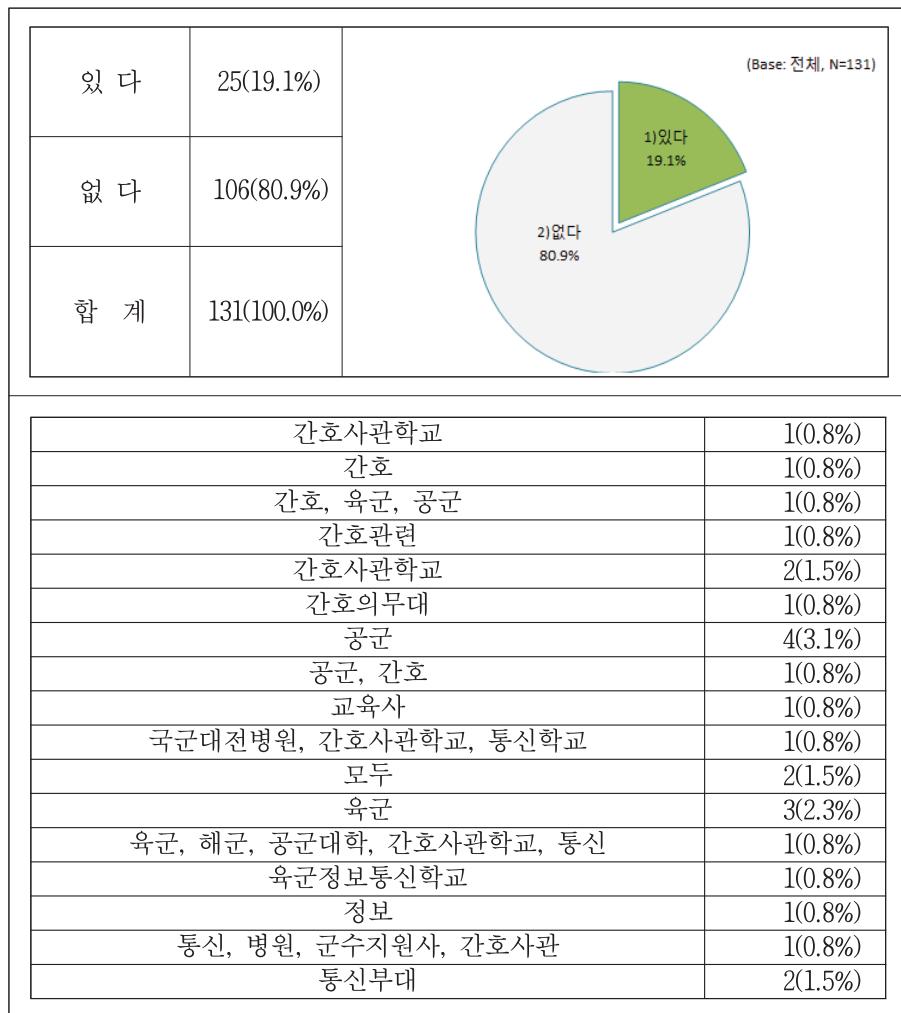
- 자운대 인근 지역주민 131명을 대상으로 자운대가 외부에 잘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응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즉, 자운대 인근에 사는 많은 지역주민들은 자운대의 존재가 외부에 잘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4-6> 자운대가 외부에 알려진 정도



- 자운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운대에 주둔하는 18개의 부대 중 알고 있는 부대명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 131명 중 25명(19.1%)만이 알고 있고 응답했고, 알고있다고 응답한 25명 대부분이 주둔 부대명을 명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부대명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18개 주둔 부대 중에 간호사관학교 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4-7> 자운대 주둔 부대명에 대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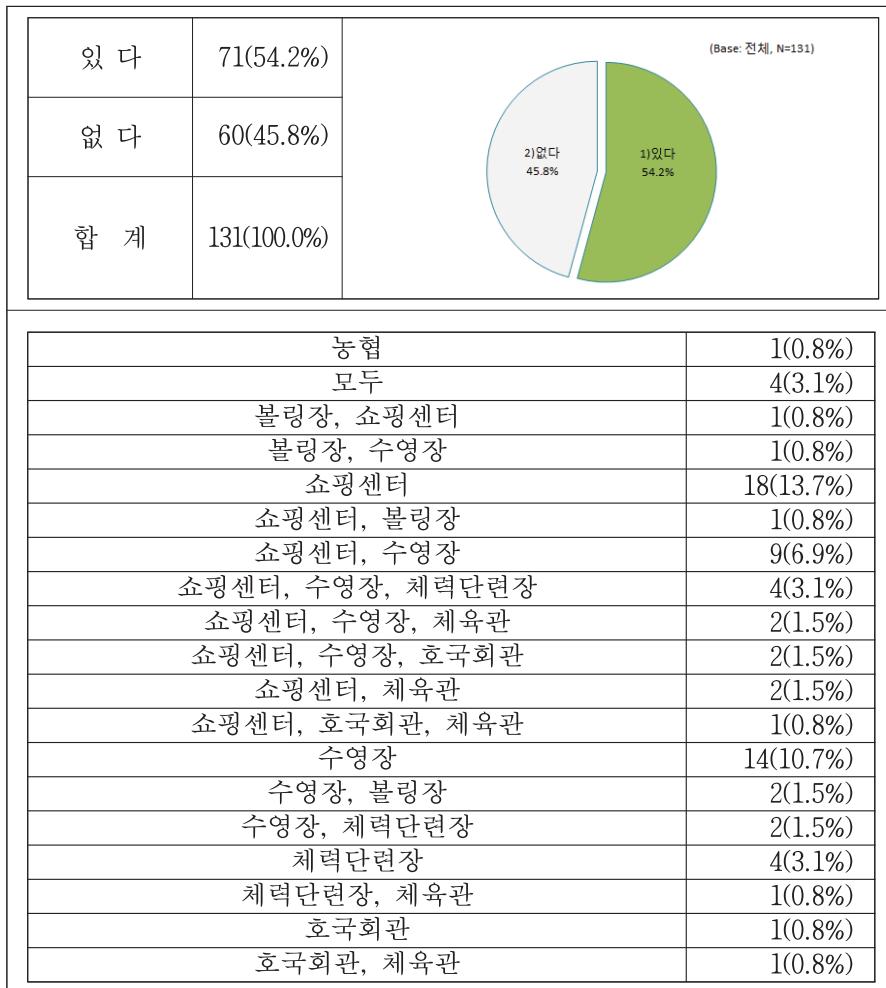


2) 자운대 편의시설 활용도

- 자운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131명을 대상으로 자운대 내에 소재하는 있는 편의시설(쇼핑센터, 수영장, 체력단련장, 호국회관, 체육관)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1명(54.2%)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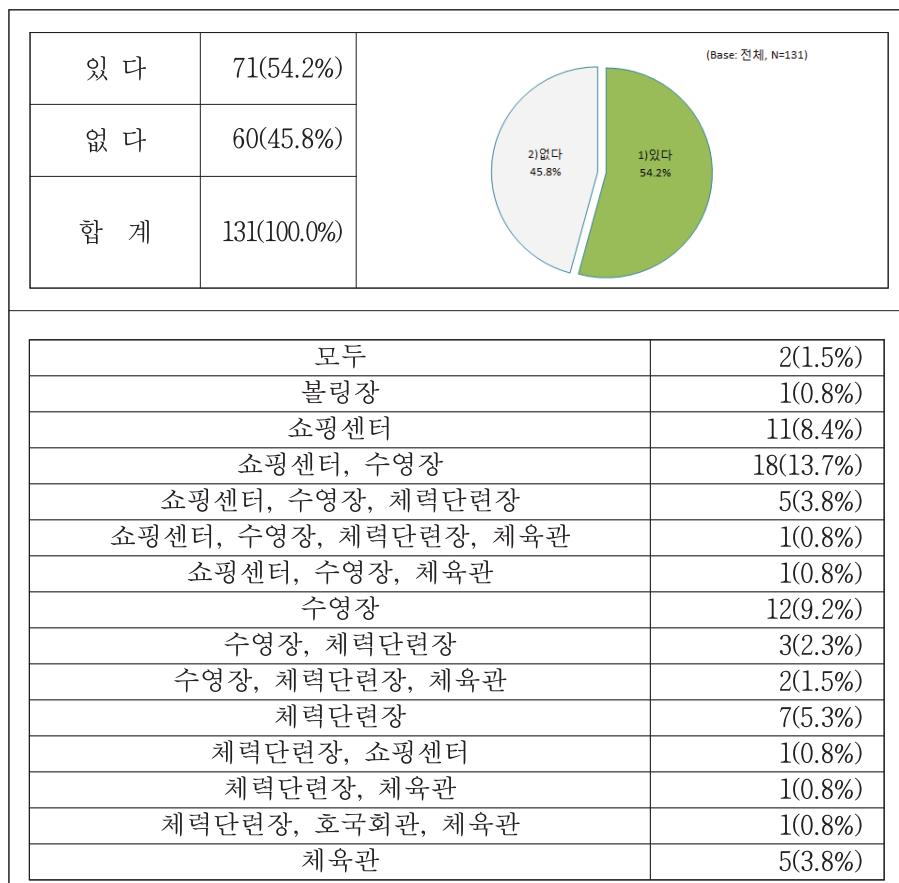
- 편의시설(쇼핑센터, 수영장, 체력단련장, 호국회관, 체육관)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71명 중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시설은 쇼핑센터와 수영장 등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4-8> 자운대 편의시설 이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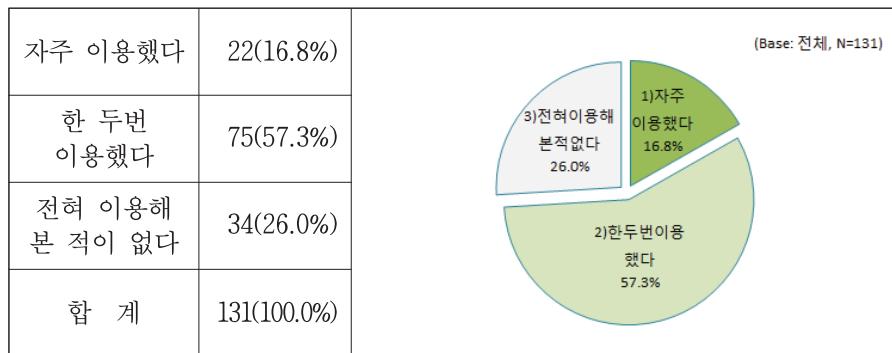
- 자운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131명을 대상으로 자운대 내에 소재하는 있는 편의시설(쇼핑센터, 수영장, 체력단련장, 호국회관, 체육관) 중 이용해 보고 싶은 시설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1명(54.2%)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이용해 보고 싶은 편의시설(쇼핑센터, 수영장, 체력단련장, 호국회관, 체육관)은 쇼핑센터,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4-9> 자운대 이용희망 편의시설



- 자운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131명을 대상으로 자운대의 개방된 통로를 이용하신 경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 대부분(97명, 74.1%)이 자주 이용했거나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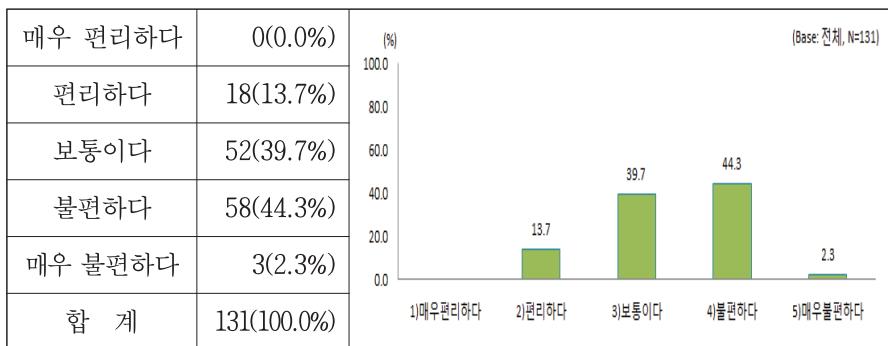
<표 4-10> 자운대 개방통로 이용도



3) 자운대 거주자의 생활여건에 대한 인지도

- 자운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131명을 대상으로 자운대까지 접근하는 대중교통의 편리성에 대해 물어본 결과, 긍정적인 응답(18명, 13.7%)보다는 부정적인 응답(61명, 46.6%)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음
 - 응답자 특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부정적인 응답이 높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부정적이었으며, 직업별로는 자영업자(60.0%)와 직장인(51.6%)로 가장 부정적임
 - 거주기간별로는 특별한 패턴은 없으나, 거주기간이 11~15년된 응답자(62.1%)가 자운대 대중교통의 편리성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4-11> 자운대 접근을 위한 대중교통 편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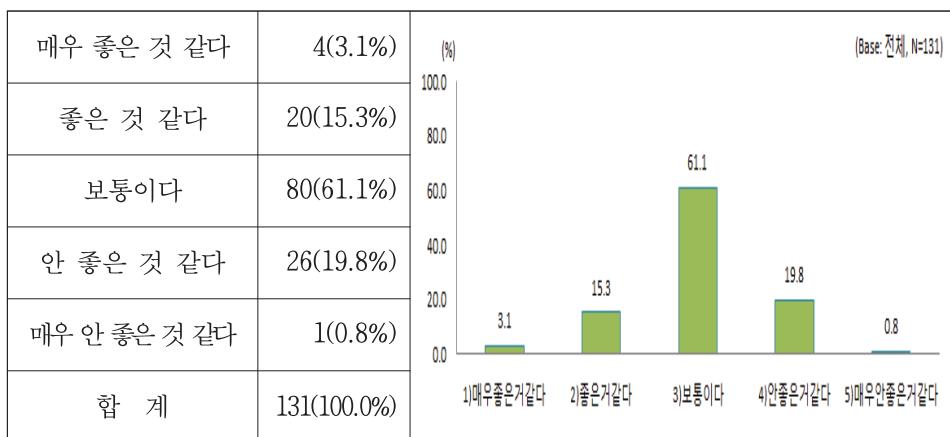


<표 4-12> 응답자별 자운대 접근을 위한 대중교통 편리성

구 분	합계	편리하다	보통이다	불편하다	매우 불편하다
합계	(131)	13.7	39.7	44.3	2.3
성별	남성	(55)	9.1	36.4	50.9
	여성	(76)	17.1	42.1	39.5
연령	20대 이하	(33)	6.1	51.5	39.4
	30대	(20)	15.0	15.0	60.0
	40대	(27)	11.1	29.6	59.3
	50대	(20)	20.0	50.0	30.0
	60대 이 상	(31)	19.4	45.2	35.5
학력	중졸 이하	(27)	18.5	40.7	40.7
	고졸	(20)	10.0	50.0	40.0
	대졸 (전문대 포함)	(54)	16.7	27.8	51.9
	대학원 졸	(30)	6.7	53.3	36.7
거주지	신성	(123)	13.0	40.7	43.9
	축목	(8)	25.0	25.0	50.0
직업	직장인	(33)	18.2	30.3	45.5
	전업 주부	(36)	13.9	41.7	44.4
	학생	(33)	6.1	51.5	39.4
	자영업	(20)	15.0	25.0	60.0
	무직	(9)	22.2	55.6	22.2
거주 기간	10년 이하	(34)	11.8	41.2	38.2
	11~15년	(29)	13.8	24.1	62.1
	16~20년	(37)	13.5	43.2	43.2
	21년 이 상	(31)	16.1	48.4	35.5

- 자운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131명을 대상으로 자운대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육여건에 대해 물어본 결과, 긍정적인 응답(24명, 18.4%)보다는 부정적인 응답(27명, 20.6%)이 더 많았으며, 교육여건에 대해 대부분이 보통 수준(61.1%)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응답자 특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부정적인 응답이 높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부정적이었으며,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직업별로는 학생이 부정적인 응답이 높았고, 거주기간별로는 특별한 패턴은 없으나, 거주기간이 10년이하인 응답자(29.4%)가 자운대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육여건에 대해 보다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4-13> 자운대 학생들의 교육여건에 대한 상대적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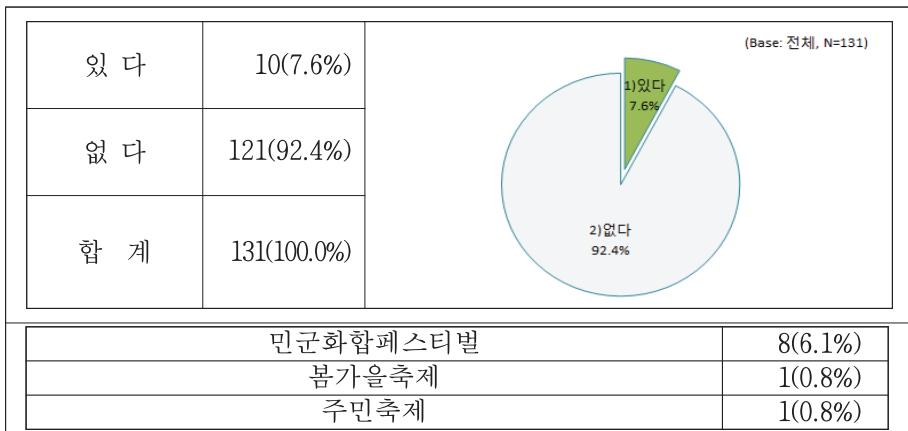
<표 4-14> 응답자별 자운대 학생들의 교육여건에 대한 상대적 인지도

구 분	합계	매우좋은 거같다	좋은거 같다	보통 이다	안좋은 거같다	매우안좋 은거같다
합계	(131)	3.1	15.3	61.1	19.8	0.8
성별	남성	(55)	3.6	10.9	56.4	27.3
	여성	(76)	2.6	18.4	64.5	14.5
연령	20대이하	(33)	9.1	6.1	57.6	24.2
	30대	(20)	0.0	25.0	45.0	30.0
	40대	(27)	0.0	22.2	70.4	7.4
	50대	(20)	0.0	15.0	60.0	25.0
	60대이상	(31)	3.2	12.9	67.7	16.1
학력	중졸이하	(27)	11.1	7.4	77.8	3.7
	고졸	(20)	5.0	10.0	60.0	20.0
	대졸 (전문대포함)	(54)	0.0	14.8	61.1	24.1
	대학원졸	(30)	0.0	26.7	46.7	26.7
거주지	신성	(123)	2.4	15.4	62.6	18.7
	축목	(8)	12.5	12.5	37.5	37.5
직업	직장인	(33)	0.0	27.3	45.5	27.3
	전업주부	(36)	2.8	11.1	69.4	16.7
	학생	(33)	9.1	6.1	57.6	24.2
	자영업	(20)	0.0	15.0	75.0	10.0
	무직	(9)	0.0	22.2	66.7	11.1
거주 기간	10년이하	(34)	8.8	8.8	52.9	29.4
	11-15년	(29)	0.0	27.6	58.6	13.8
	16-20년	(37)	2.7	16.2	59.5	21.6
	21년이상	(31)	0.0	9.7	74.2	12.9

4) 자운대 주최 행사 등에 대한 인지도

- 자운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131명을 대상으로 자운대가 주관하는 축제 등 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인 121명(92.4%)이 참여해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고, 참여한 경험이 있는 10명 중 8명이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민군화합 페스티벌’에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남

<표 4-15> 자운대 주관 축제 등 행사참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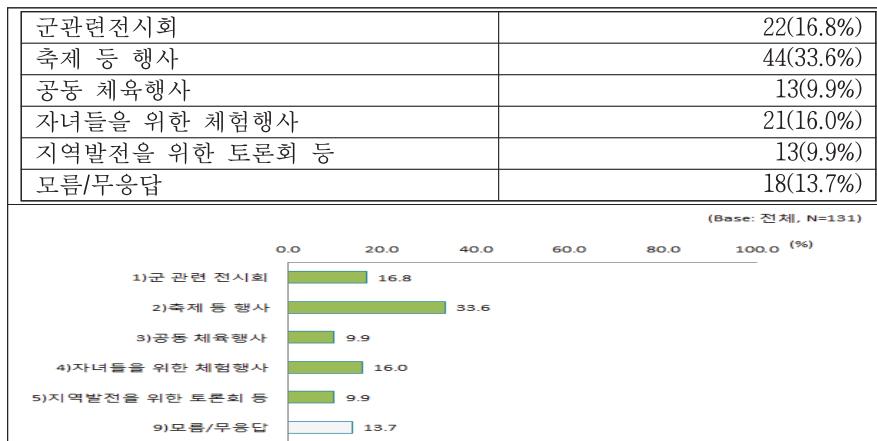


<표 4-16> 응답자별 자운대 주관 축제 등 행사참여 경험

구분	합계	있다	없다
합계	(131)	7.6	92.4
성별	남성	(55)	5.5
	여성	(76)	9.2
연령	20대이하	(33)	18.2
	30대	(20)	5.0
	40대	(27)	7.4
	50대	(20)	0.0
	60대이상	(31)	3.2
학력	중졸이하	(27)	22.2
	고졸	(20)	5.0
	대졸(전문대포함)	(54)	3.7
	대학원졸	(30)	3.3
거주지	신성	(123)	4.9
	축목	(8)	50.0
직업	직장인	(33)	6.1
	전업주부	(36)	5.6
	학생	(33)	18.2
	자영업	(20)	0.0
	무직	(9)	100.0
거주기간	10년이하	(34)	11.8
	11-15년	(29)	17.2
	16-20년	(37)	0.0
	21년이상	(31)	3.2

- 자운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131명을 대상으로 자운대에서 지역 사회를 위해 개최했으면 하는 행사가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축제등 행사(44명, 33.6%), 군관련 전시회(22명, 16.8%), 자녀를 위한 체험 행사(21명, 16.0%), 공동체육행사(13명, 9.9%) 및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13명, 9.9%)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무응답도 18명(13.7%) 있었음
 - 응답자별로는 남성은 군관련 전시회 여성은 축제 등 행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연령별로는 20대이하 및 60대 이상은 축제 등 행사를, 30대 및 40대는 자녀를 위한 체험행사를, 50대는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학력별로는 대학원졸(자녀를 위한 체험행사 선호)을 제외하고는 축제 등 행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직업별로는 직장인(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 선호)를 제외하고는 축제 등 행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거주기간별로는 10년이하 거주 응답자(자녀를 위한 체험행사 선호) 제외하고는 축제 등 행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4-17> 지역사회를 위한 자운대 개최 희망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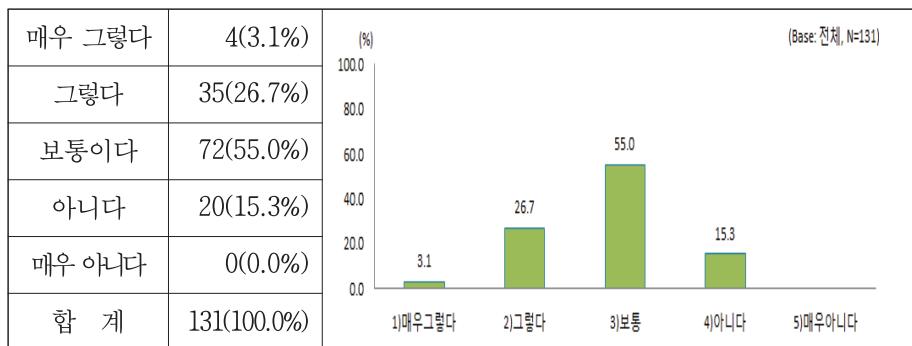
<표 4-18> 응답자별 지역사회를 위한 자운대 개최 희망 행사

구 분	합계	군 관련 전시회	축제 등 행사	공동 체육 행사	자녀들을 위한 체험행사	지역발전 을 위한 토론회 등	모름
합 계	(131)	16.8	33.6	9.9	16.0	9.9	13.7
성 별	남성 여성	(55) (76)	25.5 10.5	18.2 44.7	16.4 5.3	10.9 19.7	12.7 7.9
연 령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33) (20) (27) (20) (31)	21.2 20.0 18.5 15.0 9.7	39.4 25.0 29.6 25.0 41.9	15.2 0.0 11.1 15.0 6.5	12.1 30.0 29.6 10.0 3.2	0.0 20.0 3.7 25.0 9.7
학 력	중졸이하 고졸 대학졸 대학원졸	(27) (20) (54) (30)	11.1 20.0 18.5 16.7	48.1 45.0 29.6 20.0	14.8 5.0 7.4 13.3	11.1 15.0 14.8 23.3	0.0 5.0 11.1 20.0
거 주 지	신성 축목	(123) (8)	17.1 12.5	35.0 12.5	10.6 0.0	13.8 50.0	8.9 25.0
직 업	직장인 전업주부 학생 자영업 무직	(33) (36) (33) (20) (9)	15.2 13.9 21.2 15.0 22.2	21.2 41.7 39.4 35.0 22.2	6.1 2.8 15.2 15.0 22.2	21.2 19.4 12.1 10.0 11.1	24.2 2.8 0.0 15.0 11.1
거 주 기 간	10년이하 11-15년 16~20년 21년이상	(34) (29) (37) (31)	20.6 24.1 16.2 6.5	26.5 34.5 27.0 48.4	11.8 6.9 13.5 6.5	29.4 13.8 10.8 9.7	2.9 6.9 16.2 12.9
							14.6 10.0 18.5 6.7 0.0 8.8 13.8 16.2 16.1

5) 자운대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 필요성

- 자운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131명을 대상으로 자운대가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느냐에 대해 물어본 결과, 긍정적인 응답(39명, 29.8%)이 부정적인 응답(20명, 15.3%)보다 높게 나타났음
 - 응답자별로는 큰 특징을 발견할 수 없었음

<표 4-19> 자운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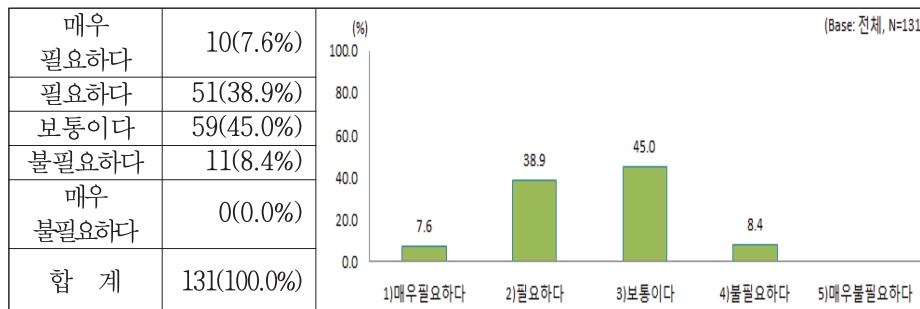


<표 4-20> 응답자별 자운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구 분	합계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합계	(131)	3.1	26.7	55.0	15.3
성별	남성	(55)	3.6	32.7	41.8
	여성	(76)	2.6	22.4	64.5
연령	20대이하	(33)	3.0	27.3	54.5
	30대	(20)	5.0	30.0	50.0
	40대	(27)	3.7	29.6	51.9
	50대	(20)	0.0	25.0	60.0
	60대이상	(31)	3.2	22.6	58.1
학력	중졸이하	(27)	7.4	29.6	59.3
	고졸	(20)	0.0	40.0	50.0
	대졸 (전문대포함)	(54)	1.9	24.1	59.3
	대학원졸	(30)	3.3	20.0	46.7
거주지	신성	(123)	3.3	24.4	56.1
	축목	(8)	0.0	62.5	37.5
직업	직장인	(33)	3.0	30.3	48.5
	전업주부	(36)	2.8	22.2	69.4
	학생	(33)	3.0	27.3	54.5
	자영업	(20)	5.0	25.0	50.0
	무직	(9)	0.0	33.3	33.3
거주기간	10년이하	(34)	5.9	32.4	50.0
	11-15년	(29)	3.4	31.0	55.2
	16-20년	(37)	0.0	18.9	59.5
	21년이상	(31)	3.2	25.8	5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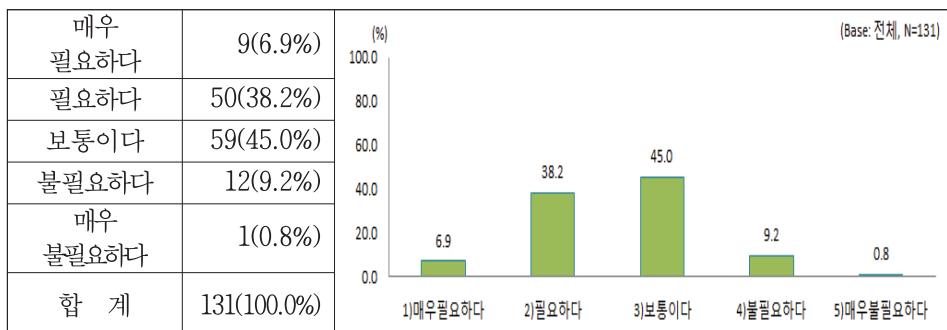
- 자운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131명을 대상으로 자운대 발전을 위해 유성구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 중 61명(46.5%)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1명(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1> 자운대에 대한 유성구의 지원 필요성



- 자운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131명을 대상으로 자운대 발전을 위해 대전시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 중 59명(45.1%)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13명(10.0%)은 불필요하다고 응답했음

<표 4-22> 자운대에 대한 대전시청의 지원 필요성



- 그 밖에 자운대와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제언들이 있었음

<표 4-23> 자운대에 대한 대전시청의 지원 필요성

교통편불편, 교육시설 안좋은(자운대내), 자운대내 치안 안좋음(도둑 많고, 수상한 사람많음)
신성동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운대 군인상대로 영업하는데 기대 만큼 되지 않음
아이들 교육사업에 기여해줬으면 좋겠음
휴일같은 좋은날 군병력이 자주 지역내 나와서 지역민과 자주 소통 도하고 봉사도 하고 서로가 군관민이 합심하여 지역간 서로의 발전의 길을 모색하였으면 함

3. 분석결과의 시사점

- 자운대와 지역주민 및 지방정부간의 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운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는데, 설문에 참여한 주민은 대부분 신성동에 거주하고 있고, 여성이 58%이며, 설문의 주요내용은 ①자운대의 이미지, ②자운대 편의시설 활용도, ③자운대 거주자의 생활여건에 대한 인지도, ④자운대 주최 행사 등에 대한 인지도, ⑤자운대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 필요성 등이며,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응답자 131명은 자운대 인근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 자운대에 대해 느끼고 있는 인상(이미지) 등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운대가 외부에 잘 알려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응답자 특성별로는 자운대 인근 생활 만족도나 자운대를 바라보는 인상에 있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그리고 40대 응답자들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자운대 이미지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인근 주민들은 자운대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으나, 자운대가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단위로 자운대를 외부에 자주 노출될 수 있도록 홍보(광고)나 자운대 주둔 부대 등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개발 및 보급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자운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131명을 대상으로 자운대 내에 소재하는 있는 편의시설(쇼핑센터, 수영장, 체력단련장, 호국회관, 체육관) 활용도는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음
- 설문에 예시된 쇼핑센터, 수영장, 체력단련장, 호국회관, 체육관 등의 편의시설 중 이용선호도가 높은 것은 쇼핑센터, 수영장 등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시설들에 대해 주기적인 환경 개선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셋째, 자운대 거주자에 대한 생활여건에 대해 물어본 결과, 대중교통 편리성과 학생들의 교육여건에 대해서는 안 좋을 것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많았고, 남성이 여성보다 그리고 30대 응답자 층이 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로 볼 때, 대전시와 유성구는 자운대를 위한 대중교통 여건이나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음

- 넷째, 자운대가 주관이 된 축제 등의 행사 참여도는 아주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향후 자운대가 개최했으면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축제 등의 행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런 결과로 볼 때, 행사참여 경험이 적은 것은 그동안 자운대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화합의 행사가 적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음
 - 2019년 4월에 개최된 ‘자운대 민·군화합 페스티벌’은 자운대를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자운대와 인근 지역주민이 합심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따라서 ‘자운대 민·군화합 페스티벌’을 정례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개최결과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향후 내실있고 발전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또한, 자운대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운대 민·군화합 페스티벌’을 대전의 대표 축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설문에 참여한 131명은 자운대가 지역발전을 위해 어느정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자운대와 자운대 인근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유성구와 대전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5장

민·관·군 협력 활성화 방안 : 자운대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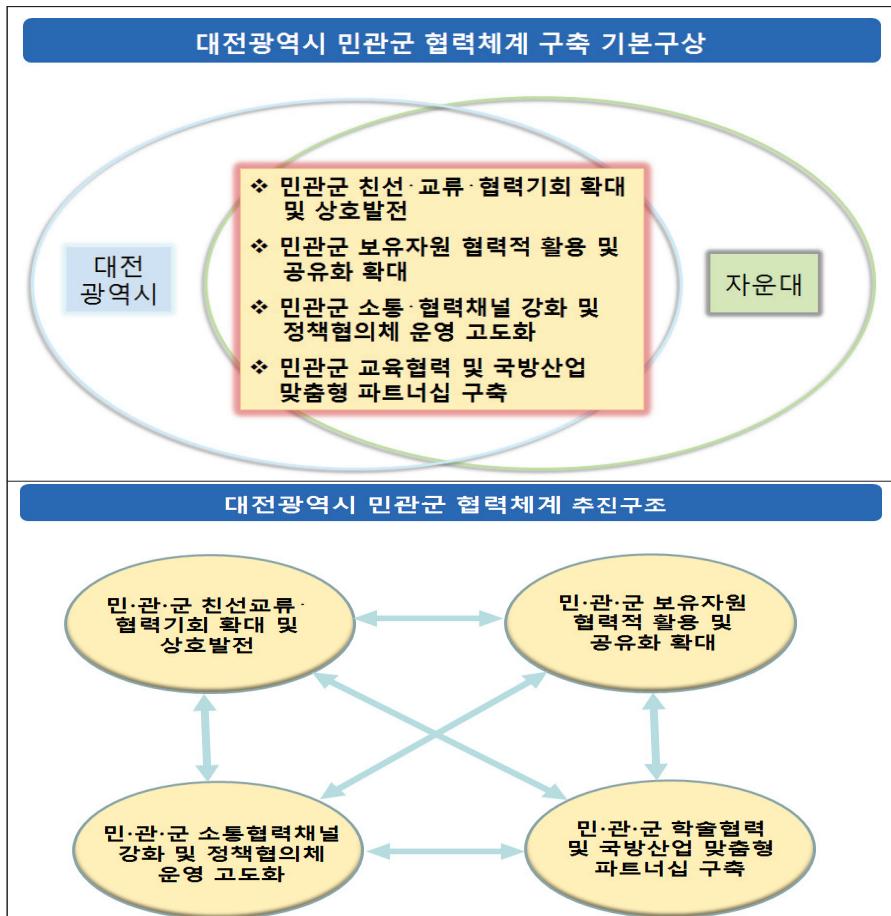
1. 대전시 민·관·군 협력을 위한 기본구상
2. 협력의 기본전제
3. 협력사업의 주요 내용

5장 민·관·군 협력 활성화 방안 : 자운대를 중심으로

1. 대전시 민·관·군 협력을 위한 기본구상

- 자운대와 같이 집합부대(Military Corps Cluster)를 이루고 있는 경우는 인근 계룡대(계룡시) 또는 상무대(장성군)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음
- 민·관·군 협력관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대전 광역시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효율적으로 극복하여 명실공히 민과 관과 군이 상생협력 발전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따라서 대전광역시와 자운대 간의 민·관·군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기본 틀과 추진구조를 설정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대전광역시와 자운대 간 기본적인 관계설정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은 광역시로서 지방정부와 국가기관인 군부대가 업무영역의 ‘상이성’과 함께, 도시·지역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공통성’을 적절히 균형 있게 살펴봐야 함
 - 대전광역시와 자운대 간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의 구성요소(4개 주요 영역)는 첫째 민·관·군 친선·교류·협력기회 확대 및 상호발전, 둘째 민·관·군 보유자원 협력적 활용 및 공유화 확대, 셋째 민·관·군 소통·협력채널 강화 및 정책협의체 운영 고도화, 넷째 민·관·군 학술협력 및 국방산업 맞춤형 파트너십구축 등으로 살펴볼 수 있음

<그림 5-1> 대전시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기본구상 및 추진구조



2. 협력의 기본전제

1) 민·군 관계와 민·군협력

- 광의의 민·군관계는 군과 민간 정치집단은 물론 군인과 국가, 군과 시민과 민간엘리트, 군과 이익집단, 군과 언론 등 군과 민간영역이 맺고 있는 제반 관계를 포괄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음

- 즉, 군과 민간영역과의 관계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리, 과학기술, 안보교육, 자연환경 등 각 분야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권력관계와 이데올로기적 영향력 등의 복합적 상호관계로 봄
- 민·군협력은 군과 민간사회의 상호의존적 협력관계라는 개념적 성격을 갖는데, 이러한 상호의존적 관계는 민간사회(시민사회)와 군대간에 서로를 제약하면서 상호협력하는 관계를 지칭하는 것이며, 이러한 상호의존적 관계는 동반자 관계(partnership)로 논의될 수 있음
- 민·군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인식의 교환 및 제어과정이 이루어지며, 이는 상호의존적 작용관계를 통하여 전체 시스템의 구성부분들이 이들의 주된 역할과 활동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원·역할 및 권한을 교환하는 것과 관련을 직·간접적으로 맺는다고 할 수 있음

2) 민·관·군 협력으로서의 개념적·실천적 확장

- 민·관·군 협력모델은 대전광역시와 자운대 간 민·관·군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한 주요한 행위주체(Main Actors)가 될 것이며, 한편으로는 이해관계자(Stake holders)가 될 수도 있음
- 이는 대전광역시와 자운대 간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추진사업관 관련하여 볼 때, 책임공유와 함께 역할분담을 가능한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같은 상호협력적 민·관·군 협력모델은 기본적으로 ‘국가안보의 지방적 구현’과 ‘군과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대전광역시와 자운대 간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의 기본전제 내지는 공유화된 가치임에는 틀림없을 것임

- 대전시에서 실천적 행위로 답해야 할 민·군관계는 상호협력적인 민·관·군 협력모델로서 포용적이고 합리적인 관계발전을 통해 항구적으로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동반성장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 요청됨

3. 협력사업의 주요 내용

1) 민·관·군 친선·교류·협력기회 확대 및 상호발전

(1) 대전광역시~자운대 간 친선 · 교류협력 교두보 확대

- 대전광역시는 자운대 지역 내 2013년 유성관광안내센터를 개소하여, 민·관·군 소통 및 공감의 기회를 구체적으로 확보, 제공하여 왔으며, 이미 2010년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자운대~충남대학교 간의 학습네트워크 협약(MOU) 체결을 통해 ‘자운대 인근지역 학습협의체’를 운영해 오면서 다양한 친선 · 교류활동을 증진시켜 왔음

	
자운대 유성관광안내센터 개소(2013.2.14)	자운대 유성관광안내센터 개소(2013.2.14)
	
유성구-자운대-충남대 학습네트워크 MOU(2010.1.26)	대전유성 자운대지역 식목행사 지원(2012.4.5)

- 대전광역시와 자운대 간 친선·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내실 있고 우수한 친선·교류콘텐츠를 발굴, 실질적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으로 가시화되어야 함
 - 특히, 자운대 근무지원단과의 정기 및 수시 업무교류·협력활성화를 포함하여 교육, 군수분야는 물론 국군간호사관학교와 국군대전병원 등을 적극 활용, 군진(軍陣)간호 및 응급의학분야 등 관련 대전권의 대학·병원들과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대전광역시장 자운대 부대 방문 격려 및 우호 증진

- 2015년 대전광역시장의 육군교육사령부 격려방문에 이어 2018년 국군간호사관학교 및 육군종합군수학교 격려방문, 합동군사대학교 친선방문 및 국군대전병원 위로방문에 이르기까지 대전시정의 수장으로 자운대와의 친선교류 및 우호증진에 꾸준히 노력해 왔음





- 국가 간의 정상외교가 매우 중요하듯이, 지역에는 기관장 간의 방문 협의가 중요함
 - 이는 앞으로 대전광역시와 자운대 주요기관·개별부대 간 공동관심사는 물론 공통현안 및 개별적으로 중요한 특정 현안 중심으로 활발한 교류·협력을 위한 소통·협의채널의 확보할 필요가 있음

(3) 자운대~대전광역시 민·군화합 페스티벌 공동개최

- 2019년 처음 개최했던 「자운대 민·군화합 페스티벌」은 교육사령부 등 18개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국방 및 군사교육도시의 특성을 살려 군이 갖고 있는 독특한 군문화 콘텐츠를 체험하며 대전지역에 알리는 특색 있는 ‘밀리터리 축제’로 개최되었음
 - 올해 첫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해외 팬들과 전국 각지에서 7만 명 이상이 찾아 대전지역의 대표 군문화축제로 자리매김 하였음
 - 이 축제는 교육사령부를 주축으로 대전시민이 함께하는 행사로 군문화 축제를 통해 민·군화합과 유대강화에 크게 기여했음
- 자운대 민·군화합 페스티벌은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몇 가지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었음
 - 우선 대전광역시와 자운대가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음

- 대전시립예술단과 연예병사의 협연, 지역주민과 군장병이 함께 하는 현명 MC 시승 체험, 마일즈 장비를 이용한 과학화 훈련 및 드론장비 시연,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복무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PX 방문과 반합 라면을 먹을 수 있는 밀리터리 푸드존 운영 등이 있음
- 또한 현재 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많은 장비에 대해 알아보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음
- 특히, 지역청소년들이 군문화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장을 제공했고, 육군의장대 공연, 군견 운영 및 시범, 특공무술 시범과 개인화기 소총 분해 및 결합 등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준비되었음



- 특히, 국방안보도시 대전을 알리는 홍보의 장이 마련되었는데, 대전을 방문하는 전국의 방문객들에게 과학안보도시 대전홍보관을 운영하고, 또한 군에서는 장병모집과 군발전상을 홍보함으로써 대전시민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충족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 그러나 축제기간이 매우 짧고, 군 지인 및 가족 위주로 일반시민 참여율이 저조했으며, TV 및 SNS 홍보 부족과 편의시설 미흡, 행사요원 부족 등으로 일부 아쉬움도 있었음
 - 따라서 자운대의 민·군화합 페스티벌은 앞으로 성장·발전할 가능성 이 충분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 같은 축제를 지속화시킬 필요가 있 음은 물론 민·군화합 페스티벌에서는 행사 공간의 확충, 홍보활동의 다각화, 흥미와 품격을 고루 갖춘 민·관·군 화합형 축제 콘텐츠로 개 선할 필요가 있음

(4) 대전광역시~자운대 상호 교류방문 및 친목활동 활성화

- 2015년과 2018년 합동군사대 외국군장교 대전시청 방문환영행사를 개 최했으며, 2017년 자운대 군부대 장병 대전시티투어와 2019년 대전광 역시 신규·수습직원 자운대 안보체험행사를 펼친 바 있음
 - 또한 대전자운초등학교 연계 외국장교자녀 한국문화체험과 2012년 대전 대한방병원 외국장교 한방의료체험 등 다양한 상호 교류방문을 실시했음
 - 아울러 2016년 대전시~자운대 요리경연대회 공동개최, 2019년 신성동·자운대 탄동천 환경정비, 자운대 화랑유치원 행사 및 자운사 작은음 악회 등 다채로운 교류·친목 활동이 개최된 만큼, 앞으로 종목의 다각화와 공동기획 및 공동운영 등의 활성화가 필요함

 <p>군사대 외국군 장교의 대전시청 방문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Daegu Metropolitan City) 2015. 1. 2.(수) 대전광역시</p>	 <p>자운대 군부대 장병 대전시티투어</p> <p>SJB e중방송</p>
<p>합동군사대 외국군장교 대전시청 방문(2015.1.7)</p>  <p>2019년 신규 및 수습 직원 공직자 안보체험 NPE News 피플아이 People Eye</p>	<p>자운대 군부대 장병 대전시티투어(2017.11.2)</p> 
<p>대전시 신규·수습직원 자운대 안보체험(2019.4.26)</p>  <p>자운초교 외국장교자녀 한국문화체험(2010. 9. 5)</p>	<p>합동군사대 외국군 수탁생 환영행사(2018.3. 7)</p>  <p>대전대한방병원 외국장교 한방의료체험(2012.4.12)</p>
<p>대전시~자운대 요리경연대회(2016.10.17)</p> 	<p>신성동-자운대근지단 탄동천 환경정비(2019.3.22)</p> 
<p>대전치과위생사회 자운대 화랑유치원 행사(2018.6.11)</p> 	<p>육군교육사령부 자운사 작은 음악회(2017.4. 28)</p> 

2) 민·관·군 보유자원 협력적 활용 및 공유 확대

(1) 대전광역시~자운대 간 행정지원 및 협력적 공공행사 활성화

- 대전광역시는 2009년 유성구 희망쉼터 민·관·군 협약체결, 2012년 신성동주민센터 자운대 이동민원실 개소·운영을 비롯하여, 대전 소방서 자운대 소방안전교육 제공·실시, 대전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및 예비군의 날 기념식 개최와 코레일-자운대 합동 철도대테러 모의훈련 실시 및 최근 2019 자운대 민·군화합 페스티벌 연계 대전시·안전협의회 자운대 안전문화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행정지원 및 공공행사를 개최해 왔음

 <p>유성구 희망쉼터 민관군 MOU(2009.6.18)</p>	 <p>신성동주민센터 자운대 이동민원실 개소(2012.9.)</p>
 <p>대전북부소방서 자운대 소방안전교육(2008.2.20)</p>	 <p>대전광역시·안전협의회 자운대 안전문화캠페인</p>
 <p>코레일-자운대 합동 철도대테러 모의훈련(2015.5.6)</p>	 <p>대전 통합방위협의회 예비군의 날 기념식(2018.4.4)</p>

- 더욱이 2017년에는 자운대 체육관 신성동 제2사전투표소 설치 및 자운대 체육관 국군대전병원 투표소를 설치하여 지원하였음
 - 이와 같은 대전광역시와 자운대 간의 민·관·군 협력프로그램은 행정지원 및 협력적 공공행사의 활성화가 필요함



(2) 유성구→자운대 ‘작은도서관’ 및 ‘방과후 학습’ 협력 지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2012년 초 합동군사대학교와 작은도서관 조성 협약체결 후, 유성 꿈나무 3호점인 자운마을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이는 지역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해 주민(시민)들의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2015년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 자운대어린이집 위탁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 자운대 교육사령부 파견 미국 ROTC 대학생들이 자운초등학교 방과후 영어캠프교실에 적극 참여하는 등 꿈나무 대상의 학·군교류 협력도 활성화되고 있음



(3) 대전시~자운대 행정서비스 제공 및 공공시설 설치·지원

- 대전광역시는 2016년 자운대 근무지원단과 운전면허시험장 간 협약체결 및 운전면허 출장서비스 제공, 자운대 지역 안심택배함 설치 지원, 2017년 대전광역시~자운대 근무지원단 태양광사업 추진 협약체결 및 협력·지원을 해오고 있음
 - 이러한 대전시의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공공지원은 앞으로 다양화·강화될 필요가 있음



3) 민·관·군 소통협력 채널 강화 및 정책협의회 운영 고도화

(1) 대전광역시~자운대 민·관·군 정책협의회 운영 제도화

- 대전광역시는 자운대의 특성을 살리고 자운대와의 협력과 상생발전을 위해 2018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8월 9일 「대전광역시 관군협의회」를 구성·운영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임
 - 관·군협의회는 자운대 지역의 8개 군부대와 대전광역시가 대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는 뜻에서 출범함
 - 따라서 앞으로 대전광역시(비상대비과)는 자운대(근무지원단)을 정책 협의회 기점(허브)으로 삼아 협의회 의장(대전광역시장)과 부의장(자운대 근무지원단장) 협력체제 공고화 및 운영 내실화
 - 특히 대전광역시(비상대비과)는 자운대(근무지원단)의 실무간사 역할을 강화하여 정기(분기별) 및 수시운영, 대전광역시와 자운대 교대개최를 통해 운영하며, 정책현안 중심의 자문위원회 운영으로 실효성 확보



(2) 대전광역시~자운대 개별 기관협력체 구성 및 확대 운영

- 2013년 대전광역시와 육군교육사령부, 2015년 대전광역시교육청과 국군간호사관학교 간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한 아래 기관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2018년 유성구청장의 교육사령부 협력방안 협의 및 2019년 대전광역

시장의 육군종합군수학교 방문협의 등을 통해 향후 각급 기관들과 자운대 주요 부대들 간 분야별 기관협력체를 구성하여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2013년 국군의무학교와 (주)한독 간의 ‘1사 1병영’ 협약, 자운대 근무지원단과 롯데백화점 간의 상생·협력·나눔 자매결연, 합동군사대학과 계룡건설 간의 ‘1사 1병영’ 협약 등을 통해 앞으로 많은 개별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제 구축이 요구됨



4) 민·관·군 학술진흥 및 국방산업 맞춤형 파트너십 구축

(1) 대전광역시~자운대 학군협력 및 상호 교육발전 활성화

- 그동안 대전광역시 관내 대학들은 자운대의 주요 부대들과 학·군 협력

을 통해 특정군사 분야의 학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상호협력 협약 (MOU) 체결 및 실질적인 군특성화 교육발전을 이끌어오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 2005년 육군종합군수학교와 한국원자력연구소를 필두로, 2006년 충남대학교, 2012년 한남대학교, 2017년 대전대학교와 육군병참교육단 간 학술교류협력 협약을 체결, 꾸준히 유지·발전시켜 왔음



- 이어 2017년 합동군사대학교와 충남대학교, 2018년 한남대학교, 육군 115공병단과 대덕대학교, 국방정신전력원과 경희사이버대학교, 자운대 근무지원단과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육군종합군수학교와 대덕대학교 간 학술교류협력 협약식 및 군사자원의 학술적 활용으로 군특성화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이는 주로 재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견학 등 수탁교육지원, 병과 및 시설분야 등의 상호발전을 위한 학술정보 상호교류, 민·관·군 정기적인 행사교류 등을 골자로 하며, 전문기술인 양성 및 국가안보에 기여

하기 위해 ‘학·군제휴’ 방식의 협약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군사학 학문체계 정립 및 군사전문가 저변확대와 전문군사교육을 받은 우수자 중 중·단기복무 장교를 획득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되고 있음



(2) 대전광역시~자운대 민·군겸용기술 협력 강화

- 지난 2013년 대전광역시는 로봇, IT, 소프트웨어를 융합하는 첨단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한 이래,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민군협력진흥원 개원하였고, 2014년 국방ICT융합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전광역시-국방과학연구소(ADD) 간 ‘민군협력 활성화 및 창조국방산업 육성’ MOU를 체결하였음

- 특히, 2015년 국방산업도시 대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 아래, 2016년 국방신뢰성시험센터 대전(안산지구) 유치 및 2018년 대전광역시 신일동에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착공 후 국방품질개선을 위한 시험평가 관련 업무를 본격 추진하고 있음

	
대전광역시 국방산업발전협의회 개최(2013.12.29)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개원(2014.4.14)
	
국방산업도시 대전 비전 선포식(2015.12.14)	대전광역시-국방과학연구소(ADD) MOU(2014.4.14)
	
국방신뢰성시험센터 대전(안산)유치 확정(2016.2.25)	대전안산지구 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2016.10.14)
	
국방신단 수출진흥 클러스터 조성 MOU(2018.10.24)	대전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예타통과(2019.6.3)

(3) 대전광역시~자운대 국방벤처산업 진흥 및 국방R&D 촉진

- 대전광역시는 대내·외 국방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대전지역의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국방의 중핵도시, 허브도시로의 중장기 국방산업 육성 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국방산업 육성 및 수출산업화와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대전시 첨단 과학 인프라와 국방산업의 연계전략을 마련했음
 - 우수 중소·벤처기업들의 국방산업 진입을 적극 유도 및 지역내 지속 가능한 국방산업 기반 확충, 4차산업혁명 연계 정부기관 유치, KAIST 등 대학 연구기관들의 국방분야 활용도 증대, ADD가 보유한 우수 군사기술의 파급효과 제고 등에 주력하고자 하였음
 - 이와 관련, 2014년 대전광역시 첨단국방산업전 개막 이래 매년 개최, 2015년 첨단국방산업전 및 미래지상전력 기획 심포지엄 개최, 2016~2017년 대전 지역특화전시회·첨단국방산업전 개최 및 2018년 대전무역전시관에서 방산부품·장비 및 첨단국방산업전 개최를 통해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우수제품을 선보이는 한편 육·해·공군 도입무기체계 부품 목록 및 견본전시, 부품국산화 진행 상황 및 완료품목 전시, 부품국산화 세미나, 전력지원체계 발전콘퍼런스, 드론 체험, 전투복 착용, 디자인 캐리커처, AR 증강현실 체험, 방위산업분야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 연결 일자리 박람회 등 다채로운 기능을 수행했음
 - 한편, 2017년 산·학·관·군 협력 대전&정보화컨퍼런스 및 2018년 국방 SW융합컨퍼런스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음

	
대전광역시 첨단국방산업전 개막(2014.11.26-28)	첨단국방산업전 및 미래지상전력 기획(2015.12.1)
	
대전 지역특화전시회 · 첨단국방산업전(2016.12.6-9)	대전광역시 지역특화 · 첨단국방산업전(2017.6.13-16)
	
방산부품·장비 및 첨단국방산업전(2018.6.19-21)	대전광역시 첨단방위산업대전(2018.6.19-21)
	
산학관군 협력 대전&정보화컨퍼런스(2017.11.3-4)	대전광역시 국방SW융합컨퍼런스(2018.11.29)

- 한편, 208년 한화시스템과 KAIST 간 국방인공지능(AI)융합센터 개소는 산학협업과 학·군융합을 통해 자주국방력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추진되었으며, 이어 2019년 육군교육사령부는 KAIST 내 인공지능(AI) 협업센터를 개소, 인공지능 기술생태계를 본격적으로 구축, 시범사업

및 전투실험 추진과 단위 전력소요를 창출하고,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핵심기술 및 플랫폼 기반의 무기체계 전력화를 추진할 예정임

- 이와 같이 대전광역시와 자운대 간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으로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첨단 국방산업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고, 특히 국방 ICT 중심의 강소벤처기업에 의한 첨단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기대되기 때문에, 대전광역시는 국방산업 선도도시로 국방자원의 민간이전 및 시너지 창출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6장

요약 및 정책 제언

1. 요약
2. 정책 제언

6장 요약 및 정책 제언

1. 요약

- 대전시 군사시설보호구역인 자운대와 지역사회, 자운대와 지방정부(대전시, 유성구) 사이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의 발굴 및 추진에 있어서 3자 모두 소극적인 입장이었으며, 추진 사업의 성과 측면에서도 그리 높게 평가할 수 없음
- 본 연구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인 자운대를 중심으로 민·관·군이 시대적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그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지역사회와 정부 등과 상호 협력관계의 형성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된 연구방법은 문헌고찰, 자운대의 현황 및 민·관·군 협력 현황, 자운대와 지역민·지방정부간의 협력에 대한 설문조사, 지역발전을 위한 민·관·군 협력 활성화 방안 등임
- 문헌고찰에서 논의한 내용은,
 - 첫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의의를 통해서 이것의 개념, 특징, 관련 법 제도, 해외 관리사례(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둘째, 민·관·군 협력의 의의를 통해서는 민·군 및 민·관·군 협력관계의 개념, 민·관·군 협력관계의 의의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셋째, 선행연구의 검토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경제적인 관점, 법·제도적인 개선, 갈등관리 관점, 그리고 민·관 상생협력

관점 등으로 논의되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하였음

- 넷째, 자운대 및 민·관·군 협력 현황에 대한 조사에서는 대전광역시는 2016년 6월 30일 현재, 총 19.9㎢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보유하고 있는 자운대의 일반적인 현황, 자운대 소속 주요부대 소개, ‘대전광역시 관·군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대전시-자운대 간의 협력 현황 및 추진 실적, 유성구-자운대 간의 협력사업 현황, 지역주민-자운대간의 협력 추진실적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음

○ 자운대와 지역주민 및 지방정부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2019년 5월 1일부터 8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대면조사를 실시하여 131부를 수거하고 분석하였는데,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응답자 131명은 자운대 인근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 자운대에 대해 느끼고 있는 인상(이미지) 등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운대가 외부에 잘 알려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둘째, 자운대 내에 소재하는 있는 편의시설(쇼핑센터, 수영장, 체력단련장, 호국회관, 체육관) 활용도는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음
- 셋째, 자운대 거주자에 대한 생활여건에 대해 불어본 결과, 대중교통 편리성과 학생들의 교육여건에 대해서는 안 좋을 것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많았음
- 네째, 자운대가 주관이 된 축제 등의 행사 참여도는 아주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향후 자운대가 개최했으면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축제 등의 행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다섯째, 자운대가 지역발전을 위해 어느정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자운대와 자운대 인근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유성구와 대전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 대전광역시와 자운대 간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의 구성요소(4개 주요 영역)는 첫째 민·관·군 친선·교류·협력기회 확대 및 상호발전, 둘째 민·관·군 보유자원 협력적 활용 및 공유화 확대, 셋째 민·관·군 소통·협력채널 강화 및 정책협의체 운영 고도화, 넷째 민·관·군 학술협력 및 국방산업 맞춤형 파트너십 구축 등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민·관·군 친선·교류협력 기회 확대 및 상호발전”을 위해서는 ① 대전광역시~자운대 친선·교류협력 교류보 확대, ② 자운대~대전광역시 민·군페스티벌 공동개최 지원, ③ 대전광역시~자운대 상호 교류방문 및 친목활동 다각화 등 추진
 - 둘째, “민·관·군 보유자원 협력적 활용 및 공유화 증진”을 위해서는 ① 대전광역시~자운대 행정지원 및 협력적 공공행사 활성화, ② 대전광역시(유성구)~자운대 작은도서관 및 방과후 학습 지원, ③ 대전광역시~자운대 현장기반 행정서비스 제공 및 공공시설 설치·지원 등 사업 추진
 - 셋째, “민·관·군 소통·협의채널 활성화 및 정책협의체 운영 고도화”를 위해서는 ① 대전광역시 자운대 부대방문 및 소통·협의채널 확보, ② 대전광역시~자운대 민·관·군 정책협의회 운영 제도화, ③ 대전광역시~자운대 개별 기관협력체 구성 및 확대 등의 사업 추진
 - 넷째, “민·관·군 학술협력 및 국방산업 맞춤형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서는 ① 대전광역시~자운대 학·군협력 및 상호 교육발전 활성화, ② 대전광역시~자운대 민·군겸용기술협력 강화, ③ 대전광역시~자운대 국방벤처산업 진흥 및 국방R&D 고도화 등 사업 추진

2. 정책 제언

- 앞에서 서술한 민·관·군 상생협력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및 협력 활성화 방안을 바탕으로 대전광역시와 자운대 간 민·관·군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민·관·군 친선·교류협력 기회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서는 ①대전시민자운대 부대방문 활성화, ②유관기관·단체 친선 부대견학 확대, ③자운대 민·군페스티벌 지원 강화, ④정책현안 워크숍 및 세미나 공동개최, ⑤자운대 부대(부서)~대전시(실·국) MOU 체결, ⑥‘명예시민·명예시장’, ‘명예부대장’, ⑦대중교통서비스 확충을 통한 주민 및 시민의 접근성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민·관·군 보유자원 협력적 활용 및 공유화를 증진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①상호 지식·정보·노하우·노웨어 공유화, ②민·군기술협력 촉진(Spin-on/Spin-off), ③관련분야 전문가 인적교류·협력 증진, ④조직간 자료교환 및 협의 추진, ⑤협력·공동사업 확대, 필수분야 참여 강화, ⑥자운대 내 유휴부지(약 5만평)를 활용하여 가칭 ‘민·군화합체육센터’ 건립 추진 등의 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셋째, 민·관·군 소통·협의 채널 활성화 및 정책협의체의 운영을 고도화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과제로는 ①계룡시의 사례에서와 같이 자치법규의 제정이 필요하고, ②관·군협의회의 운영 횟수 확대와 교차개최 추진, ③민·관·군협력체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가칭 ‘대전광역시 국방안보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를⁶⁾ 제정하여 민관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함
- 민관군 업무를 담당할 전담조직의 설치는 대전광역시 비상대비과 내 가칭 ‘민군협력팀’을 신설하는 방안임

- 넷째, 민·관·군 학술협력 및 국방산업 맞춤형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과제로는 ① 대전시 중·장기 국방산업발전 연계 추진, ② 민·군기술협력 국방벤처·R&D산업 촉진, ③ 방산기술개발 수출 진흥 상호지원 활성화, ④ 민·관·군 산·학·연 기술협력 생태계 구축, ⑤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계룡대·자운대·국방대 협력네트워크 구축, ⑥ ADD·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대덕연구단지·KAIST·충남대 등 연계체계 지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6) 동 조례는 대전시의 군방안보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군부대 및 주민과의 소통·화합, 상생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하며, 주요내용은 국방안보도시 육성 발전계획 수립, 국방안보도시 육성 사업 및 지원, 국방안보도시발전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조항 포함

참고문헌

- 강소영·강한구(2013),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국민의 참여,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134(3) : 325-354.
- 강한구(2018), 접경지역 관련 [군사시설보호법]의 이해와 토지이용 방안, 접경지역 통일연구, 1(1) : 77-118.
- 강한구·김종대(2012), 현행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보완 방향, 주간국방논단, 한국국방연구원.
- 계룡시(2018), 계룡 평화안보역사관 건립 타당성 연구.
- 국방부(201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 국회국방위원회(2010),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관련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 김범수(2015a), 강원도 접경지역의 민군관계 실태와 과제: 철원군을 중심으로, 강원발전연구원.
- 김범수(2015b), 접경지역의 민군관계, 실태와 개선 방안, 정책메모, 강원발전연구원.
- 김영봉(2006),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의 설치가 정주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국토논단, 104-117.
- 김종범(2004), 지방자치와 군사시설보호구역 정책의 재정립, 사회과학연구, 제17집 : 19-28.
- 김현수(2008), 경기북부 접경지역개발의 실태와 지원제도의 개편방안, 도시행정학보, 21(1): 269-286.
- 박성범(2014),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민-군 갈등의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57집: 33-47.
- 심재정(2017), 접경지역 군사규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71집 : 202-216.
- 장순옥(2016),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 최병학·류상일(2008), 충청남도 민·관·군 협력거버넌스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 최용환(2005), 민주화 이후 군과 지역사회 : 협력적 민군관계를 위한 과제, GRI연구논총, 11(3) : 61-81.
- 한국은행 강원본부(2015), 강원 접경지역의 성장지체 요인 및 경제 활성화 방안.
- 허 훈(2008), 군과 지역사회의 협동거버넌스 구축 방안,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2(4) : 27-50.

부 록

자운대와 지역민·지방정부 간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대전세종연구원에서는 [자운대와 지역민·지방정부 간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운대 주변 지역민을 대상으로 자운대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는 자운대-민-관 협력 방안을 발굴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귀하게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를 내는 목적으로 사용될 뿐, 개인별 세부 응답 내용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으며, 통계법에 의거하여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겠지만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5월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최길수 드림

※ 본 조사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42-530-3517, 팩스: 042-530-3528, E-Mail: kschoi@dsi.re.kr)

해당란에 ○ 표 하시거나, 직접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1] 귀하는 자운대 인근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만족 한다 ②만족 한다 ③보통이다 ④불만족 한다 ⑤매우 불만족한다

[문 2] 귀하는 자운대에 대한 인상이 어떻습니까?

- ①매우 좋다 ②좋다 ③보통이다 ④안 좋다 ⑤매우 안 좋다

[문 3] 귀하는 자운대가 외부에 잘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문 4] 귀하는 자운대에 주둔하는 18개의 부대 중 알고 있는 부대명이 있으십니까?

- ①있다(부대명: _____) ②없다

[문 5] 귀하는 자운대 편의시설(쇼핑센터, 수영장, 체력단련장, 호국회관, 체육관) 중 이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시설명: _____) ② 없다

[문 6] 귀하는 자운대 편의시설(쇼핑센터, 수영장, 체력단련장, 호국회관, 체육관) 중 이용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시설명: _____) ② 없다

[문 7] 귀하는 자운대까지 접근하는 대중교통의 편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편리하다 ②편리하다 ③보통이다 ④불편하다 ⑤매우 불편하다

[문 8] 귀하는 자운대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육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좋은 것 같다 ②좋은 것 같다 ③보통이다 ④안좋은 것 같다 ⑤매우 안좋은 것 같다

[문 9] 귀하는 자운대가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아니다 ⑤매우 아니다

[문 10] 귀하는 자운대의 개방된 통로를 이용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자주 이용했다 ②한 두번 이용했다 ③전혀 이용해 본 적이 없다

[문 11] 귀하는 자운대가 주관하는 축제 등 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 ①있다(행사명: _____) ②없다

[문 12] 귀하는 자운대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개최했으면 하는 행사가 있으십니까?

- ①군 관련 전시회 ②축제 등 행사 ③공동 체육행사 ④자녀들을 위한 체험행사
⑤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 등 ⑥기타(행사명: _____)

[문 13] 귀하는 자운대 발전을 위해 유성구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필요하다 ②필요하다 ③보통이다 ④불필요하다 ⑤매우 불필요하다

[문 14] 귀하는 자운대 발전을 위해 대전시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필요하다 ②필요하다 ③보통이다 ④불필요하다 ⑤매우 불필요하다

[문 15] 끝으로 자운대와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무엇이든 제시해 주십시오.

«**응답자의 특성**»

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2. 연령	① 20세 이하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세 이상
3. 학력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졸(전문대포함) ④ 대학원 졸업 ⑤ 기타 _____		
4. 거주지	_____동		
5. 직업	① 직장인 ② 전업주부 ③ 학생 ④ 자영업 ⑤ 무직 ⑥ 기타 _____		
6. 거주 기간	① 10년 이하 ② 11~15년 ③ 16~20년 ④ 21년 이상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